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우)4872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5, 5층
전화 : (051) 806-9032 팩스 : (051) 806-9042

제2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 나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길-

제2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

- 일 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주 최 : 부산일보사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 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 찬 : BNK 부산은행

제 2 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

□ 일 시 : 2017년 11월 9일 오후 2시

□ 장 소 :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주 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 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 찬 : BNK 부산은행

- 순 서 -

①부 시상식

■개회

■참석자 소개

■인사말

■축사

■경과 및 심사보고

■시상식

■기념 촬영

②부 수상작 발표회

■최우수상

- 조영현(대학부; 충남대 자치행정학과)외 1명

- 주제: 지방의회와 주민의 소통제도

■우수상

- 일반부: 정다빈(서울시 송파구)

- 주제: 지방의회로의 청년의 정치참여

- 대학부: 박지혜(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주제: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FIT제도 활성화 방안

■장려상

- 일반부: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 주제: 지방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 일반부: 이법성(울산시 남구)외 2명

- 주제: 두드림! 프로젝트

- 대학부: 백승권(전북대 자율전공학부)외 1명

- 주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업 상품판매 및 판촉 공간 지원사업 '고유'(Go You)

- 대학부: 강부석(동의대 정치외교학과)외 3명

- 주제: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Big Data Marketing을 통한 부산시의 관광활성화

- 목 차 -

◉ PPT자료

최우수상

-조영현(대학부,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외 1명

-주제: 지방의회와 주민의 소통제도…… 5

우수상

일반부: 정다빈(서울시 송파구)
-주제: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참여 …… 16

대학부: 박지혜(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주제: 에너지분권화를 위한 FIT제도 활성화방안
…… 25

장려상

일반부: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주제: 지방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 33

일반부: 이법성(울산시 남구)외 2명

-주제:두드림!프로젝트…… 37

대학부: 백승권(전북대 자율전공학부)외 1명
-주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업 상품판매 및 판촉공간 지원사업'고유'(GoYou)
…… 50

대학부: 강부석(동의대 정치외교학과)외 3명
-주제: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Big Data Marketing을 통한 부산시의 관광활성화…… 57

◉ 한글자료

최우수상

-조영현(대학부,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외 1명
-주제: 지방의회와 주민의 소통제도····· 63

우수상

일반부: 정다빈(서울시 송파구)
-주제: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참여 ····· 77

대학부: 박지혜(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주제: 에너지분권화를 위한 FIT제도 활성화 방안
····· 90

장려상

일반부: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주제: 지방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 101

일반부: 이법성(울산시 남구)외 2명
-주제:두드림!프로젝트····· 113

대학부: 백승권(전북대 자율전공학부)외 1명
-주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기업 상품판매 및 판촉공간
지원사업 '고유'(Go You)
····· 126

대학부: 강부석(동의대 정치외교학과)외 3명
-주제: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Big Data Marketing을 통한 부산시의
관광활성화····· 138

참고자료 1(공모 알림기사, 웹포스터) ····· 152
참고자료 2(조직현황) ····· 154

제2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

풀뿌리 자치 협의체를 통한 소통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영현, 곽경수

• 주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찬 : BNK 부산은행

01

現 지방자치의 문제

Presentation of problem

• 주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찬 : BNK 부산은행

現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YTN기획 풀뿌리, 소통의 담을 넘다 -제3부-]

現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우리 사회 간 소통 수준 _ 지방의회와 국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5년	22.5	53.8

現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① 지방 정부의 지나치게 큰 규모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초 정부의 평균 규모

구 분	기초정부 수 (개)	기초정부 평균인구 (명)	기초정부 평균면적 (km²)
프 랑 스	36,763	1,743	15
스 위 스	2,715	2,762	15
한 국	230	210,870	423
일 본	1,772	67,313	210
한 국	230	210,870	423

출처: 한상효, 2010. 한국 지방자치제의 개편 방향과 발전방향. 한국연구재단.

· 주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찬 : BNK 부산은행

現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의원 1인당 인구수
광역의원	65,084
기초의원	17,539

1인당 인구수
65,084
17,539

· 주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찬 : BNK 부산은행

現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② 기존 소통제도의 한계

① 주 복잡한 절차와 지나친 규모 안담회

가

나. 조례의 재정과 개폐 청구제도

다. 주민소환제도

02

문제 해결방안

Problem - sol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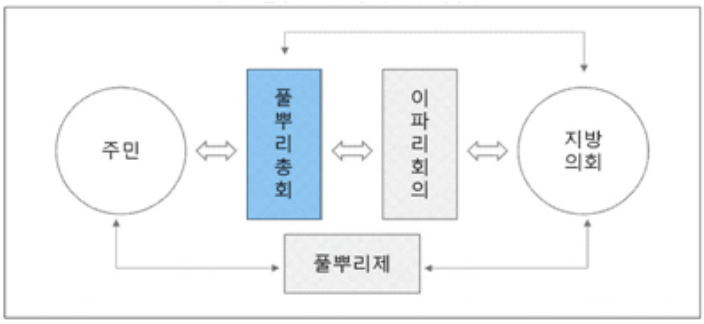
문제 해결방안

풀뿌리 자치협의체란?

문제 해결방안

문제 해결방안

풀뿌리자치협의체 작동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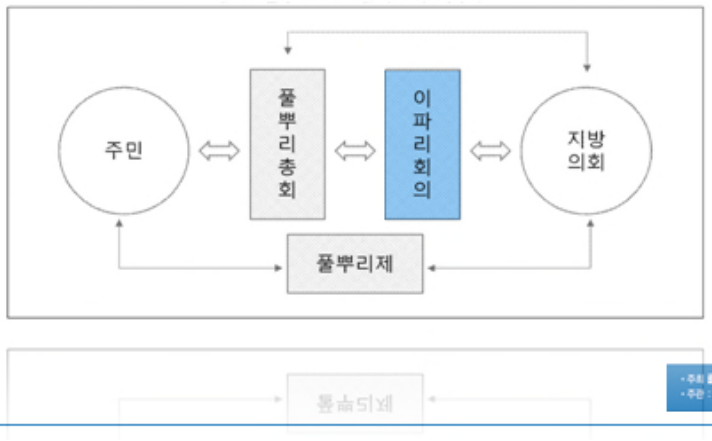


문제 해결방안

① 풀뿌리총회

문제 해결방안

풀뿌리자치협의체 작동구조



문제 해결방안

① 이파리회의

지방의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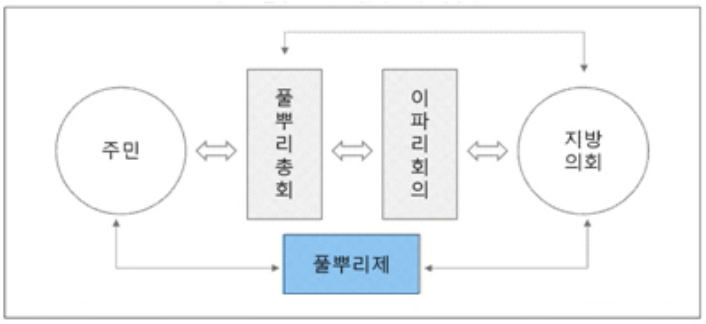
자치위원

문제 해결방안

① 이파리회의

문제 해결방안

풀뿌리자치협의체 작동구조



03

기대효과

Expectation effectiveness

기대효과

부정적 시각 해소	주민 의사 적극 반영	지방자치 학습의 장
Removal of negative view	Opinion reflection	Political study

기대효과

부정적 시각 해소	주민 의사 적극 반영	지방자치 학습의 장
Removal of negative view	Opinion reflection	Political study

기대효과

부정적 시각 해소	주민 의사 적극 반영	지방자치 학습의 장
Removal of negative view	Opinion reflection	Political study

감사합니다

플랫리 자치 협의체를 통한 소통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영현, 곽경수

• 주최 :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관 : (사)부산시민재단 • 협찬 : BNK 부산은행

제2회 지방자치·지방분권 정책제안 공모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

정 다 빈
(서울시 송파구)

INDEX

1. 문제제기

2.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부재

2-1 지방의회의 청년의원 부재
2-2 청년 유권자의 저조한 관심 및 참여

3. 지방의회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3-1 원내로의 정치 참여
3-2 원외로의 정치 참여

4. 결론 및 기대효과

1. 문제제기

1. 문제제기

-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수
-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저조하며,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느낌

1. 문제제기

- 지방자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지방의회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 등이 전무

- 지방의회에서 청년의원의 부재로 인해 청년의 이익과 문제점 등이 대의되지 않은 실정

→ 청년의 부재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

2.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부재

청년의원 부재, 청년 유권자의 저조한 관심 및 참여

2-1. 지방의회의 청년의원 부재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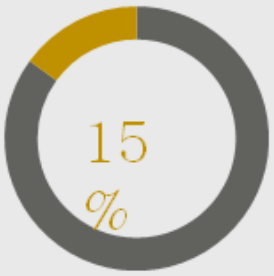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			기초의회		
	평균	최연소	최고령	평균	최연소	최고령
1회	50.34	27	75	50.21	25	76
2회	50.55	32	75	50.44	28	72
3회	50.72	30	68	51.18	26	73
4회	50.95	29	73	50.73	26	77
5회	51.26	33	71	51.72	27	74
6회	53.39	28	73	53.69	27	76
총 계	51.20	29.8	72.5	51.33	26.5	74.7

- 역대 지방의원들의 평균연령은 50대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2-1. 지방의회의 청년의원 부재

임계수치 (critical mass)



지방의회 내 청년의원 현황

-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내 청년의원의 비율은 약 5% 이하 (<표 2> 참고)
-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20%)와 부산광역시 (11%)
- 청년의원의 비율은 임계수치인 15%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수준임

→지방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원내진입이 시급한 실정

2-2. 청년 유권자들의 저조한 관심과 참여

- 청년 유권자들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투표 참여는 저조한 상태임
  ※ 선거의식 수준과 정치효능감 등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성훈 2017)

-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정치적 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더뎌질 수밖에 없음

3.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

원내(院內) 및 원외(院外) 정치 참여

3-1. 원내(院內)로의 정치 참여

1) 지방의원으로서 청년

청년할당제 도입	청년가산점 보장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청년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필요 ▪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에 우선적으로 한정하여 실시 ▪ 청년으로서 직능대표 및 소수자 정치참여 보장 등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	▪ 청년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 필요 ▪ 공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의 메리트가 보장되어야 함	▪ 당내 고위당직자나,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정치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 ▪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1. 원내(院內)로의 정치 참여

1) 지방의회 보좌진으로 청년

-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좌관제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김찬동 2010; 조석주·박기관 2010; 임영덕·신나은 2012; 문원식 2014) →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 / 청년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 확보

-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이 지방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3-2. 원외(院外)에서의 정치 참여

1) 지역청년과의 소통창구 확대

SNS를 통한 소통 확대

-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해야하고 소통은 활발해야 함
- SNS를 통해 청년정책, 지역행사, 지역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지방의회와 청년이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상호간의 거리를 축소

의사결경과정에 청년의 참여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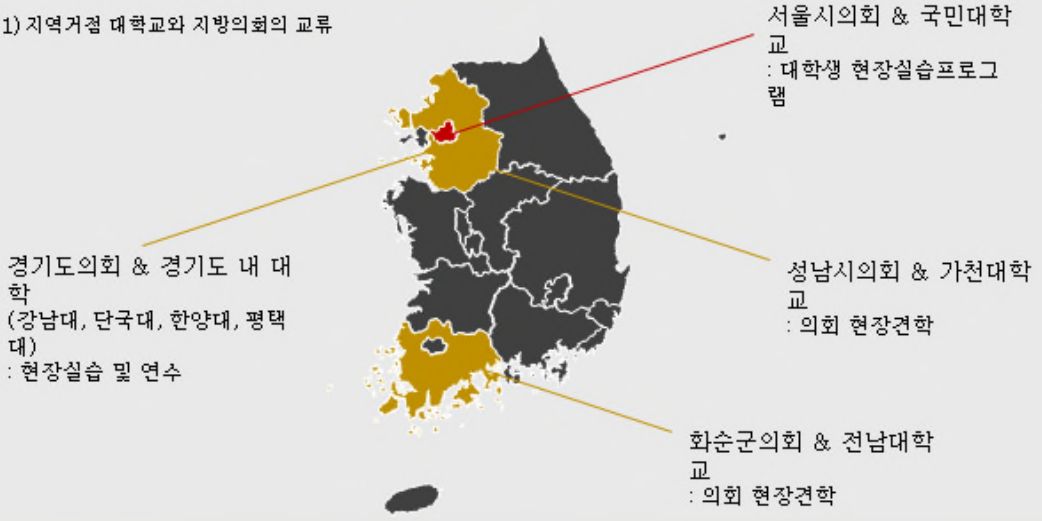
- 청년의 참여 플랫폼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구축
- 지역별 청년자치 홈페이지 개설
- 지방의회 내 오픈공간 제공
- 토론회 및 포럼 등 지방의회와 청년 간 정보 공유의 기회를 확대

이해관계자로서 역량 확보

- 정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년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정치역량교육 및 강화 기회를 제공

3-2. 원외(院外)에서의 정치 참여

1) 지역거점 대학교와 지방의회의 교류



4. 결론 및 기대효과

4. 결론 및 기대효과

-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청년
- 지방의회로의 청년의 정치 참여는 풀뿌리민주주의 공고화로 가는 첫 걸음

<참고문헌>

고승희. 2015. "지역주민의 참여의식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177-184.

김영민. 2008. "세방화 시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생활정치의 장(場)으로서의 지방의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1): 149-178.

김창동. 2010. "지방의회 보좌인력 강화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김향림. 1991.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사회과 지역정치성교육." 『사회과교육』 24: 50-60.

문림식. 2014. "지방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4(2): 1-21.

이진환. 2014.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부산 소재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분석." 『공공정책연구』 31(1): 225-252.

이성훈. 2017. "정치참여의식이 시민의 정치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395-405.

임영덕, 신나은. 2012. "지방의원 의정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5(3)

조석주, 박기관. 2010. "지방의원 보좌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0(3): 395-412.

최성. 2014. "고양형 시민참여 지방자치의 현실과 발전방향." 『공공사회연구』 4(2):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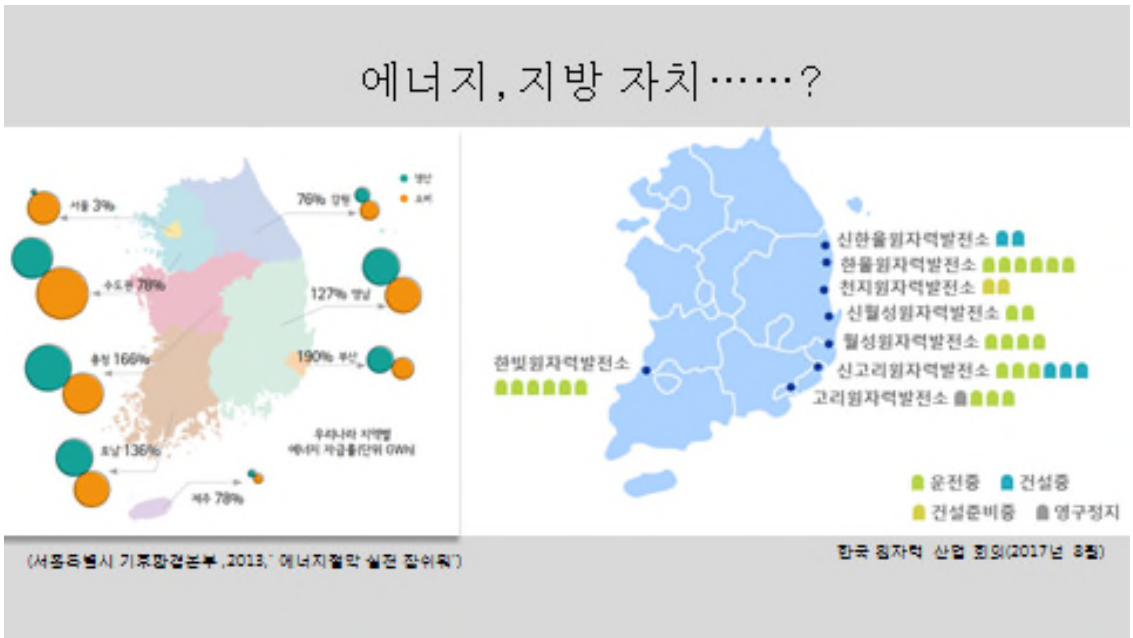
하세현, 윤이화. 2012.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연구』 15(1): 157-182.

Kanter, Rosabeth Moss. 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985-990.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

감사합니다.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FIT 제도
활성화 방안
-박지혜



Local Autonomy & Energy Governance

에너지 생산 ≠ 에너지 소비

국내 에너지 자립도 4.3% (2014년)

원전 밀집도 0.207 (세계 최고 수준)

- 에너지 자립도 =(1차 에너지 공급 – 에너지 순수입)/1차 에너지 공급(원자력 포함)
- 원전 밀집도 : 단위 면적당 원전 설비 용량

중앙 집중형 에너지 → 분산형 에너지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책	- 소극적 - 의존적 - 소비자 중심 - 공급 중심
분산형 에너지 정책	- 적극적 - 자립적 - 생산자 중심 - 수요 중심

Decentralization
탈집중, 지역화

De-carbonization
온실가스, 탄소 배출 감소

Diversification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FIT 제도 활성화 방안

제안 배경

1. 에너지 분권화　　2. FIT와 RPS

정책 현황 분석

1. 중앙-지방 계획의 연계성 부족　　2. 시장 구조의 문제

정책 제언

1. 거버넌스의 전환
2.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 병행
3. ICT 기반의 수요 관리

FIT 발전 차액 지원 제도(Feed In Tari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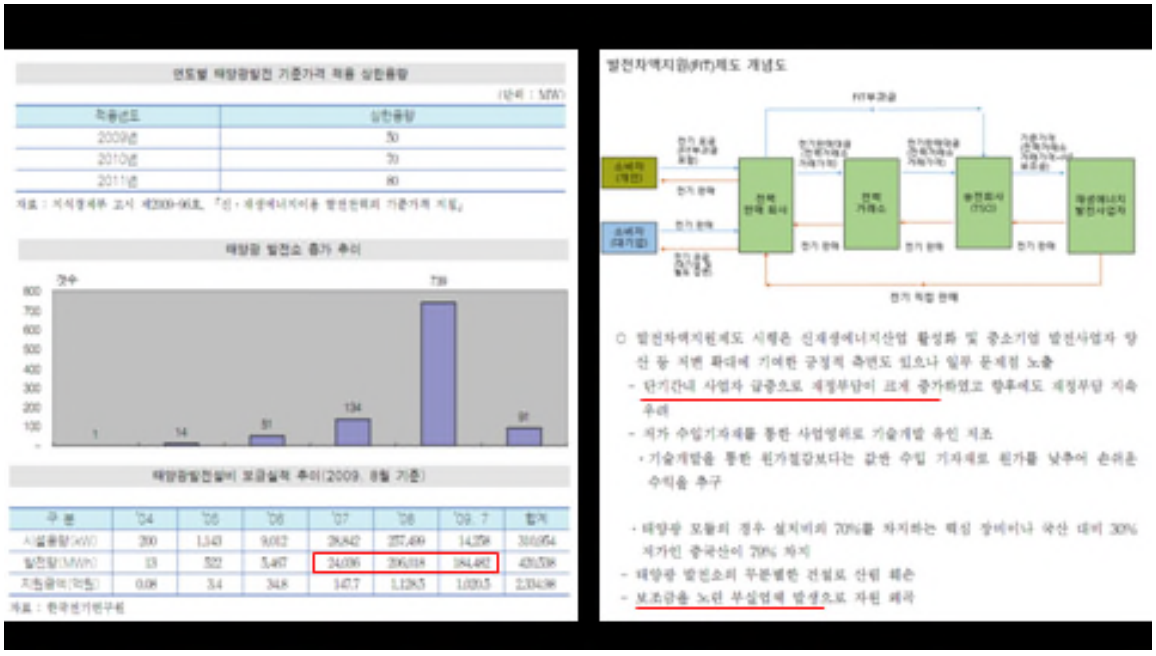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한국에너지 공단

국내에서 2002년~2011년 동안 시행, 재정부담의 이유로 폐지됨

- 소규모 분산형이 가능
-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발전 조합' 식의 시민주도적 에너지 전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제도적 발판 마련
-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2000년 4,125GWh에서 2011년 8,017GWh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지역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

출처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및 시사점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1

제품 구성과 가격
599,000원
왜 우리집햇빛발전소일까요?
우리집이
발전소가 됩니다
설치를 원하시면
햇빛발전


연도별 태양광발전 기준가격 적용 설한용량
(단위 : MW)
적용년도
설한용량
2009년
50
2010년
70
2011년
80
태양광 발전소 증가 추이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실적 추이(2009. 8월 기준)
발전차액지원(FIT)제도 개념도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은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발전사업자 창업 등 저변 확대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일부 문제점 노출
- 단기간내 사업자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재정부담 지속 우려
- 저가 수입기자재를 통한 사업영위로 기술개발 유인 저조
-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보다는 같은 수입 기자재로 원가를 낮추어 손쉬운 수익을 추구
- 태양광 모듈의 경우 설치비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장비이나 국산 대비 30% 저가인 중국산이 70% 차지
- 태양광 발전소의 무분별한 건설로 산림 훼손
- 보조금을 노린 부실업체 발생으로 자원 폐곡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한국에너지공단

2012년 부터 FIT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없음.

→의무할당량방법 - 에너지공급 · 관리 사업자 자체 생산 - 외부 조달(타사 거래 등)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자들에게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부여

→ 한전관련의 6개 발전 자회사 : 한전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GS EPS 등과 같은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위주

박진희 교수(홍익대학교)는 "정부에서 의무할당제를 추진하려면 적어도 환경과괴적인 조력발전에는 공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3분의 1, 5분의 1의 가치만 인정하는 등의 가중치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무할당제는 대용량 발전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고, 사업자들 역시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발전에만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이 한도는 재생에너지, 업자리 늘린다"
[3.11 후쿠시마가 남긴 것 ⑧] 발전차액지원제도, 개도입해야- 2012.03.12 프레시안

현황 분석

중앙-지방의 정책 연계성 부족

- 통일성, 일관성이 부족
-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계획
- 지방은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구조
- 지방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만한 풍부한 조직 및 인력 다반사이고 담당인력이나 전문성도 부족하여 에너지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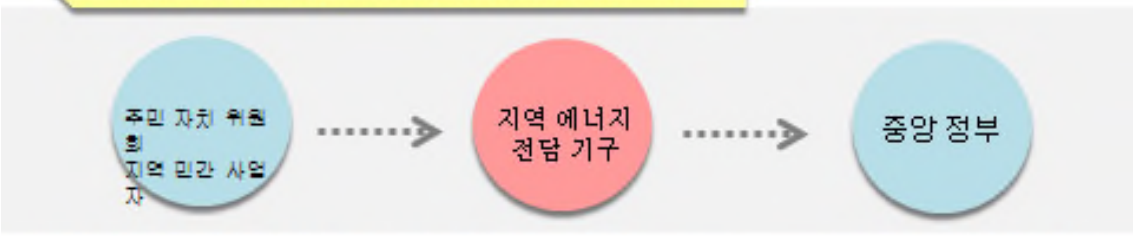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단

시장 구조의 문제

- 경쟁적 요소보다 가장 주요한 부분을 두는 결과기조로 인한 문제
- 지역적과 타 정책적의 일관성을 통한 장기적 측면의 산업구조 자체의 문제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피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다.
-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1. 거버넌스의 전환 : "에너지 사용자"가 결정하는 에너지

- 중앙 집중식,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전환 필요.
- 아래로 부터의 계획 수립
- 지자체 소속 기구 중심으로 지역별 에너지 계획 수립 우선화



- 주민자치위원회 월급제, 책임성 강화
- 대표성, 전문성 강화
- 주민 교육, 정책 홍보 기획

-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공급 연구
- 에너지 현황 분석, 정보 제공
- 주민 위원회 및 강등 관리

- 지자체간 정책 교류의 기회
-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급
- 공정성 평가

2.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 병행:

상호보완적인 정책 병행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

- FIT 와 RPS 의 목표 구분할 필요 있음
- 수치적 규제시 시대적 가치 반영('환경', '지속가능성', '안전')
- 전체 시장 구조를 바라보고 신재생에너지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향한 정책이 개발 돼야 함

➡ FIT 제도가 정부 주도의 보급시스템이라면, RPS 제도는 민간 주도 시스템

FIT와 RPS의 비교

구분	FIT	RPS
장점	[illegible]	[illegible]
단점	[illegible]	[illegible]

3. ICT 기반의 수요 관리:

과학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수요예측과 합리적 계획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결론

금금량이 많아져 시장가격이 하락하기 이전까지는 FIT 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지원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는 FIT를 계승해서 개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동시에, 이를 위해 본 제안서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전환, 시장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병행, ICT 기반의 정확한 수요관리를 통해 분권화 된 에너지 금금 및 신·재생에너지 금금 확보 방법을 제안 하였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충분히 늘아져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 참여와 토론이 정책결정의 당연한 수순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한 세가지 내용 외에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민간 사업자 지원책, 주민 수익구조 등 다양한 제도가 연구 및 시도될 필요가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Ⅰ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Ⅱ 지방공공기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Ⅲ 선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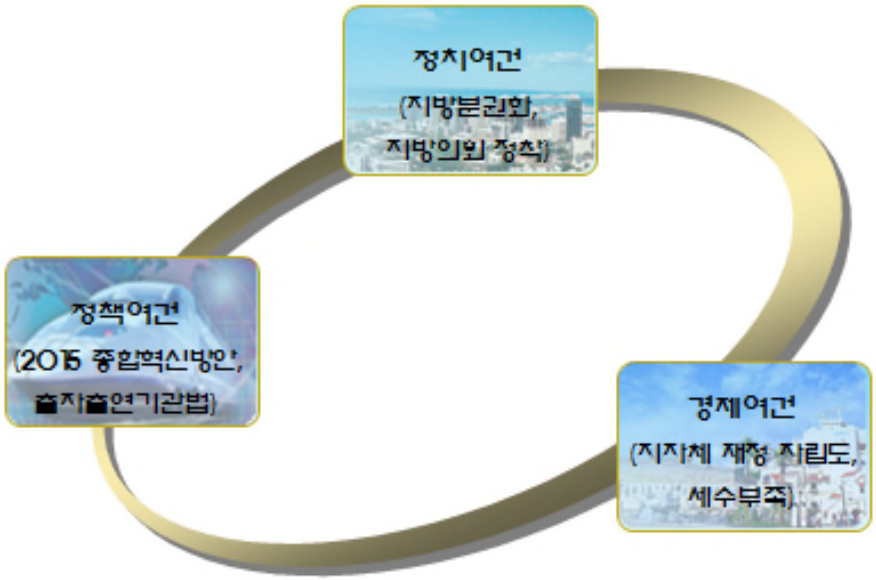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지방공공기관 운영사례

선진화 방안 제시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합리적 재정·경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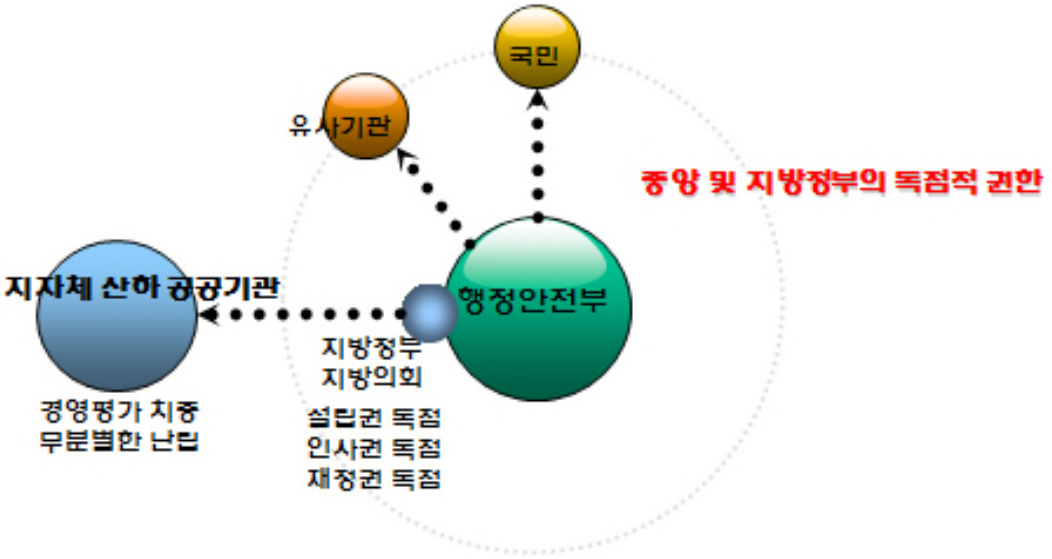
정책방향



방만경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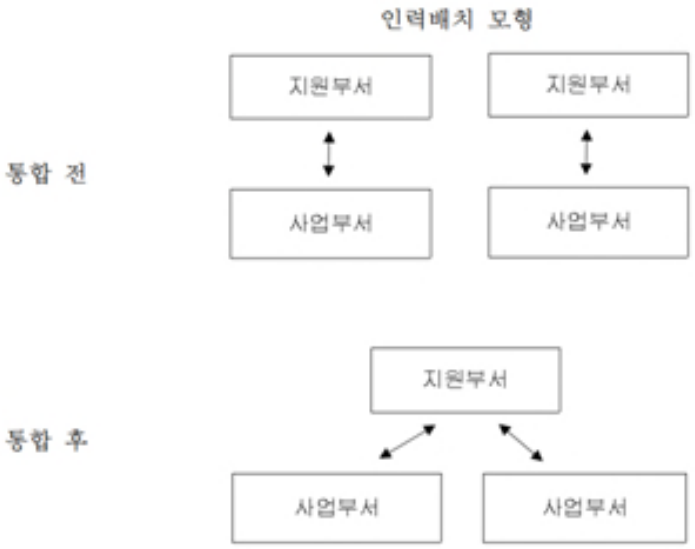
서울시	인천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신설 추진 - 에너지공사 문화보건의료재단 관광진흥재단 120재단	통합 공기업의 재분리 -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관광공사 재분리
경기도	**기타**
산하 금융기관 통폐합 실패 -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24개 기관의 업무조정이 4개 기관에 국한됨	제주도 산하기관의 난립 경북개발공사 골프장 추진 실패 부산시 수돗물 유상판매 실패

방만경영 원인



선진화 방안

혁신사례


인력배치 모형
통합 전
지원부서
지원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통합 후
지원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맺음 말

지방공공기관 선진화
적극적 지원과 협력
(기관+국민+지방 및 중앙정부)
친화적 여건
•지방분권화
•자치제 정립
•풍부한 사업여건
추진목표
•재무타당성 확보
•제도개편
•상설감독
•선진사례 벤치마킹
리스크 관리
•경기침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실경영

지방자치 · 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두드림!』프로젝트

Do, Dream!

두드려라!,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이 범 성
성 명	강 기 룡
	이 범 성

Contents

Ⅰ. 제 안 배 경

Ⅱ. 운 영 계 획

1. 운영 형태
2. 프로그램 개요
3. 예산운영 계획
4. 목적과 비전

Ⅲ. 운 영 계 획

1. 사회환경 분석
2. 대상분석
3. 경쟁력 분석
4. 시사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 1조 2항

Ⅰ. 제 안 배 경

〈왜 제안하는가?〉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참정 불가능한 구조

박근혜 정부의 몰락(= 비선실세 / 소통단절 / 무능과 무식)

스마트 폰 사용량이 PC 사용량 초과

〈왜 필요한가?〉

시민의견 제안 방법의 필요성 증대

비현실성 정책 → 현실성 반영도 향상

기존 운영중인 '부산민원 120' 어플 활용도 저조

Ⅱ. 운 영 계 획

1. 운영 형태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을 통한 시민제안 및 의견을 수렴

우수 제안 선정 분기별 공청회 실시

공청회 결과 기사화 및 입법 발의

〈운영계획〉

부산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 · 팀 운영

어플 ' 부산민원 120' → 'two드림!' 명칭 변경 및 프로그램 전면수정

Ⅱ. 운 영 계 획

1. 운영 형태

〈운영시기〉

적합성 및 효율성 판단 등 충분한 분석과 준비기간 필요

2018. 3. 1(목) 시행

3.1절 – 새로운 정치의 출범 의미부여

내년도 시 운영예산 편성, 집행

〈부가사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

부산일보사(기사), 도시철도공사(광고) 등 기타 관공서 및 기업체

Ⅱ. 운 영 계 획

※ MBC 예능 무한도전 '국민의원' 모티브

Ⅱ. 운 영 계 획

※ MBC 예능 무한도전 '국민의원' 모티브

〈무한도전은 무한도전일 뿐!〉

자유한국당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해프닝

무한도전은 백지수표급 파급력을 지님

무한도전을 통해 국민의 관심도 향상

방송의 영향으로 입법발의 추진에 가속

Ⅱ. 운 영 계 획

※ MBC예능 무한도전 '국민의원' 모티브

〈무한도전은 무한도전일 뿐!〉

국민 예능 – 1회성 프로그램, 지속 불가능

현실은 무한도전이 아님 = 시행착오 예상

방송당시 짧은 기간동안 1만개 이상 의견 제시

※ 초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 예상됨

시행과정상 행정업무 수행에 혼선 우려

Ⅱ.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조회수, 좋아요, 추천, 댓글 등 종합

↓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제안자 포함 시장 및 시의원(1~2명), 관련 해당 부처 담당자 /

↓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상품 - 상금 등)

☞공청회 진행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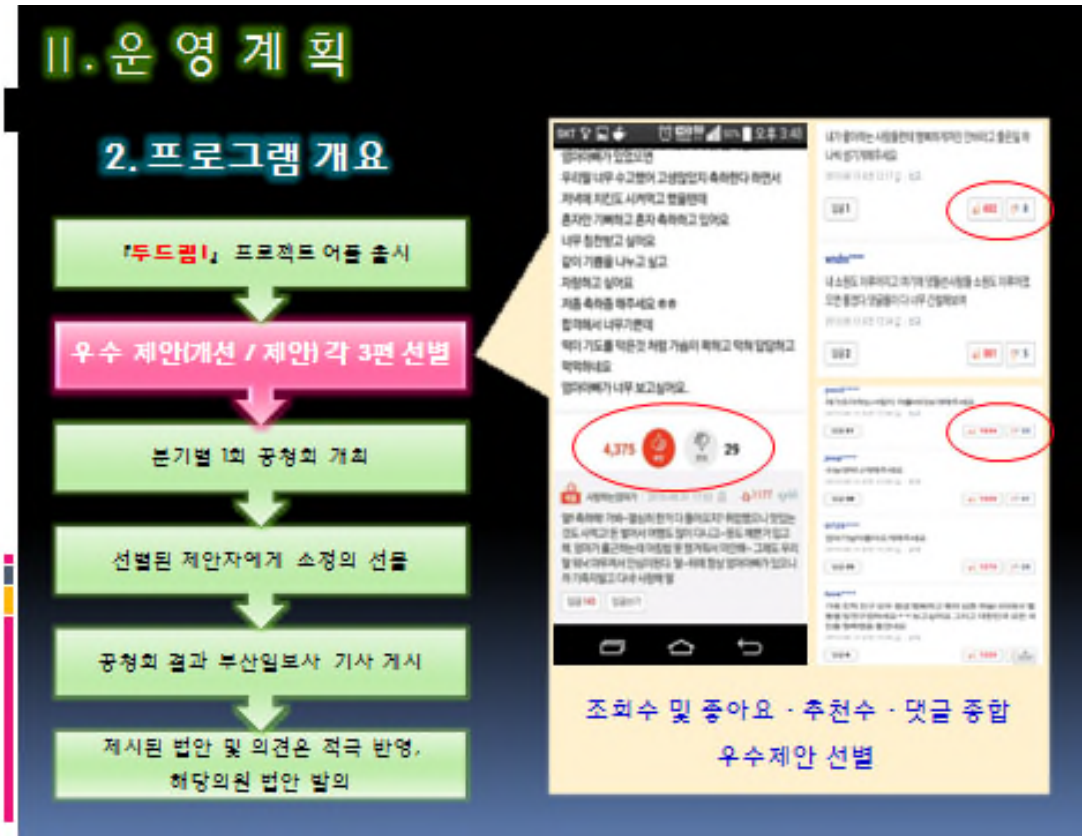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제시된 내용의 운영, 진행사항 또한 게시

↓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II.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제안사항
/
법안발의
개선사항
/
법안개정
『두드림!』
Foreigner


II.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조회수 및 좋아요 · 추천수 · 댓글 종합
우수제안 선별

Ⅱ.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대상자 : 우수 시민제안자
시장 및 시의원
제안 관련부처 담당자
부산일보사 기자단

※ 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참석(질의 · 응답)

Ⅱ.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공청회 진행 후 시상식(상금 및 상품)

※ 시민의 적극 참여 유도 및 동기 자극

Ⅱ.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

↓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공청회 내용 및 결과 진행사항 기사화

※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정의 투명성 확보

Ⅱ. 운 영 계 획

2. 프로그램 개요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

↓

공청회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 게시

↓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
해당의원 법안 발의

'양보다 질'

시민의 대표이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모순

※ '김영란 법' 은 대표적 모순된 법안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

Ⅱ. 운 영 계 획

3. 예산운영 계획

구 분	예 상 예 산 (만원)	기 타
어플 제작 · 운영	어플 제작 : 1,000 (최초 1회)	
광고제작	광고영상 제작 : 5,000 광고전단 제작 : 5,000	부산출신 방송인 섭외 리플렛 및 현수막 등
광고 · 홍보 (6개월)	옥외전광판 : 6,000 (시청외곽 월 500만원) 사직구장 : 2,000 대중교통 광고 : 3,000 아파트 E/L : 3,000 (매당 5천원)	전광판 3개 (시청, 서면, 남포동) 버스 · 지하철 1,000대 지정
상품, 상금(분기)	상품, 상금 : 1,200 (300X 4회)	공청회시 지급
관리자 채용	관리 · 운영자 : 6,000	전담부서 2인
기타 제반비용	기타 운영비 : 1,000	
총 예 산	**3억 4,200만원**	**첫해 예상 예산**

※ 광고 · 홍보비는 해당 관련업체 문의만 사항임

Ⅱ. 운 영 계 획

4. 목적과 비전

시민의 참정권 확대로 보다 현실성 높은 법안 발의

독단적이고 일방적 정치 견제장치

참정방법의 간편화로 참정기회 제공

〈기대효과〉

『두드림!』 프로젝트가 바람직한 정치상 제시

자발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

선진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

Ⅲ. 환 경 분 석

1. 사회환경 분석

「두드림!」 프로젝트는 전 정부의 정치부패 및 실패로 파생

새 정부의 출범은 곧 정당교체의 과도기
- 시스템의 교체를 위한 최적의 시기

정경유착으로 인해 뿌리박힌 적폐청산 시기
-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 전 정부 핵심인사와 삼성가 대표의 구속

시민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
-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Ⅲ. 환 경 분 석

2. 대상분석

민주주의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무의미
- 350만 부산시민 모두가 대상
- 해양관광 수도 부산의 관광객 목소리 역시 수용

7월 시정 평가 전국 최하위
- 전국 광역시·도정 긍정평가 30%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최하위
- 전국 만족 / 불만족 평균(%) : **57.3 / 35.2**
- 부산 만족 / 불만족 평균(%) : **51.0 / 40.8**

'방관자 효과' 팽배
- 비합리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저 방관

Ⅲ. 환 경 분 석

3. 경쟁력 분석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혁신 정치의 필요성 증대

스마트 폰을 통한 정보공유의 시대
- PC이용보다 접근성 우수

참정의 간접성과 불편함 → 참정의 간소화 가능

'부산민원 120' 올 상반기 이용현황(PC)
- 민원신청 꾸준한 증가추세
- 동일 안건에 대한 중복 민원 다수

월별	민원(건)	제안(건)
1월	6,760	2,066
2월	6,966	2,005
3월	7,319	1,982
4월	7,676	1,975
5월	8,221	1,994
6월	8,657	2,005
평균(월)	7,599.8	2,004.5

Ⅲ. 환 경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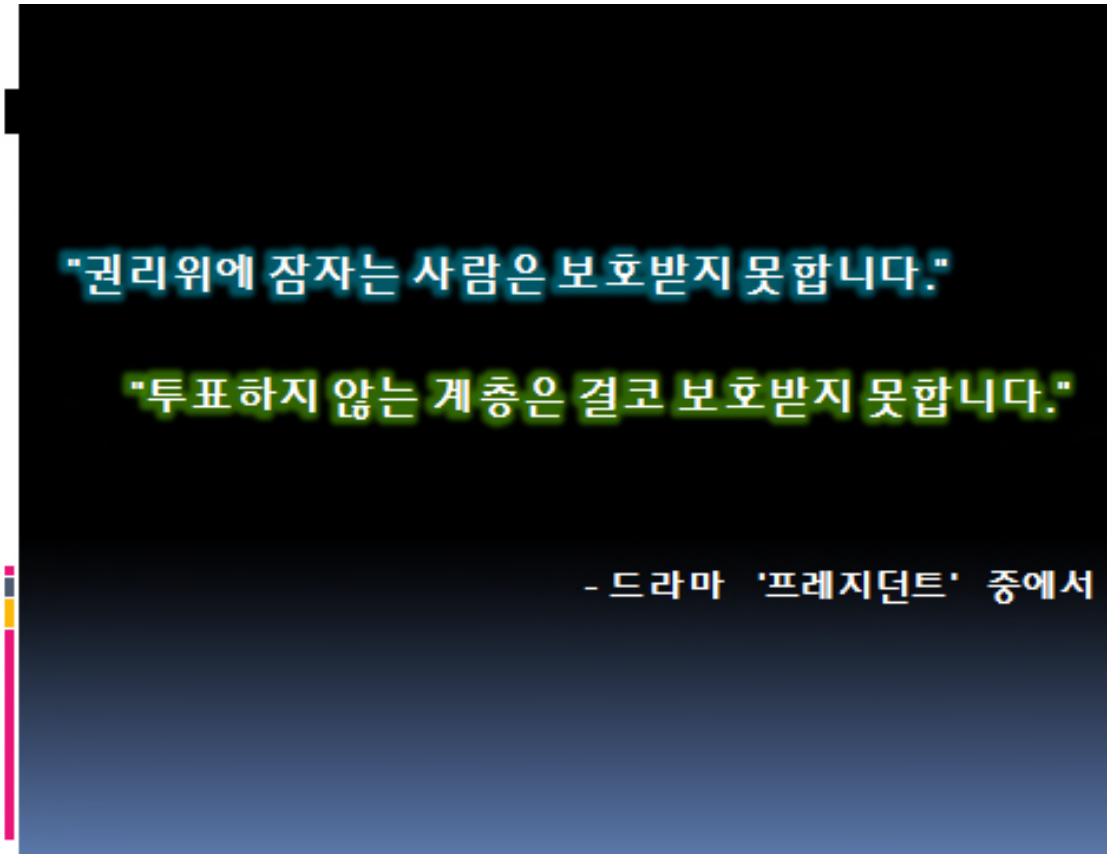
4. 시사점

정치 불신주의 팽배하지만 여전히 방관자적 위치

정치참여의 욕구는 있으나 방법은 극히 제한적

'부산민원 120' 운영중이나 소통에 제한적

정치참여의 접근이 쉽고 다양화되어야 함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 드라마 '프레지던트' 중에서

『두드림!』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청회와 기사화, 입법발의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시
내 의견을 모두에게 공유하여 '브레인스토밍' 효과 유발
부산시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광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율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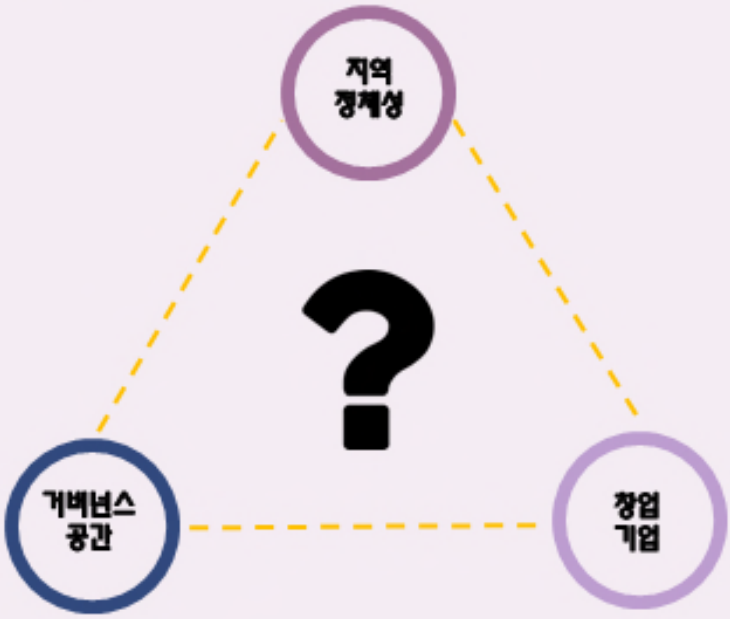
Thank you.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기업 상품
판매 및 판촉 공간 지원 사업

고유 (Go You)

DREAM LINER

1.아이디어 도식도



2.현황분석

[1]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회적 공유 공간의 재해석.

[2]지역 경쟁력을 위한 지역적 특색과 상품들의 결합

[3]다양한 창업 지원 센터들의 상품의 판매 및 판촉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활용해 관광지로 만들어낸 사례의 부재.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역으로부터 좋은 상품 디스플레이 기회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마련해 지역 경제 효과 상승할 수 있는 제안이 필요

3. 제안목적

GO
YOU

지역 내 기업들의 생태계 흐름 및 관광 동선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공간 확보

청년 창업 기업들의 판매 및 판촉을 지원해 좋은 사례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함

지역 문화 산업과도 연계해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역할 또한 부여

○ 문화 공간부터 경제와 문화를 망라하는 상업 센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조성

○ 비즈니스와 문화 산업에서 관광산업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계되는 공간 프로젝트>

4. 제안설명

왜? Go you인가?

01 거버넌스가 지원하는 공간 플랫폼을 통한 지역 창업 기업 지원

02 지역 특화 상품 판매를 통한 문화와 상업 중심지로 지역 이미지 제고

03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협업 형태로 참여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

5.선행사례

경기도 주식회사

장점

[1]. 다양한 창업기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 입주시켜 판매 및 판촉 지원.

단점

[1] 지나친 대기업 배제
[2] 각 업체별 판매망 공개

쿠마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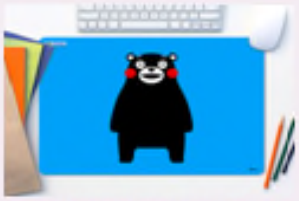
장점

[1].공공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둠.
[2] 지역 기업들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원한 좋은 예

단점

[1] 한 상품 위주의 상점 (사업 확장성 부족)
[2] 오프라인 상점만 지원

6. 선행사례 - 차별점

기존 지자체	경기도 주식회사	쿠마몬
		
지역 기업들의 직접 판촉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관광지로서의 역할 부여	지역 내 대기업과 증견기업도 특정조건에서 협업 형식으로 사업 참가 가능하게 함.	거버넌스 차원에서 온라인 플래폼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 기획 판매

7. 사업활성화, 제도적보완

(1) 사업 활성화

방송 매체 홍보 + 희소성 전략 + 기프티콘 및 인센티브

(2) 제도적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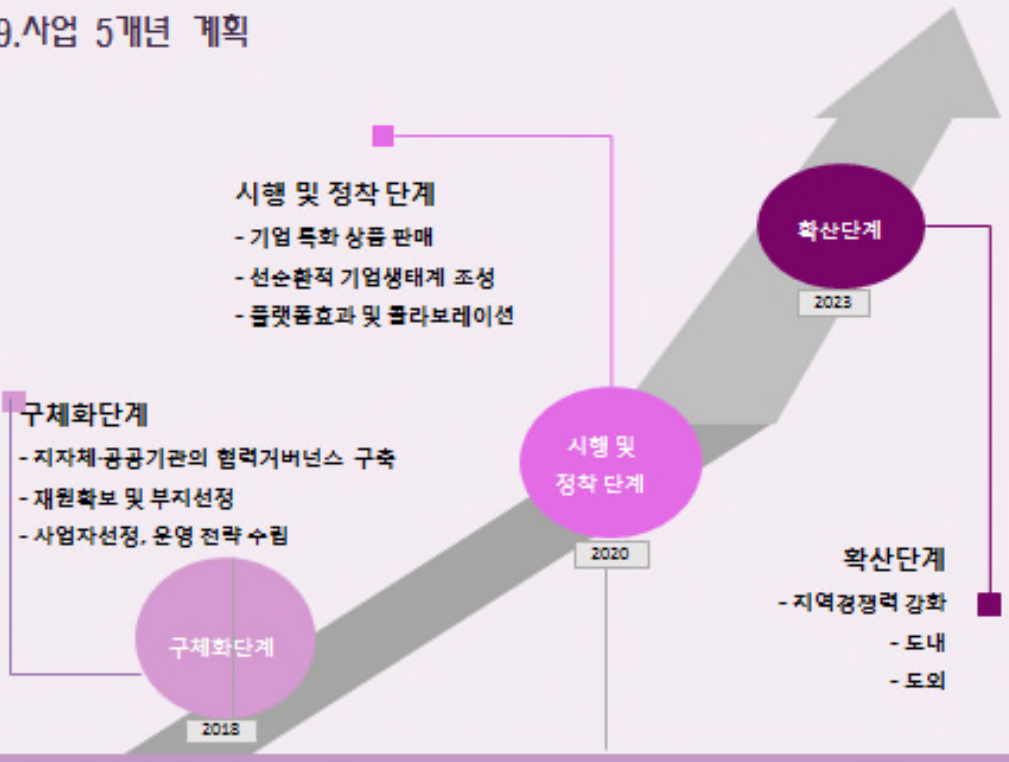
지역 청년 고용제 + 지방세 의무 부과 + 지역 봉사

8.판매 제품들 예시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들
<든허리랑 호두빵>

창의적인 중소기업 특화상품
<구급기능이 되는 라이프클락>

9.사업 5개년 계획



10.실행계획

지자체, 시민 협의체를 통한 사업 선정 및 구체화

협의체를 통한 입점 기업 선정

온, 오프라인 매장 업체 및 부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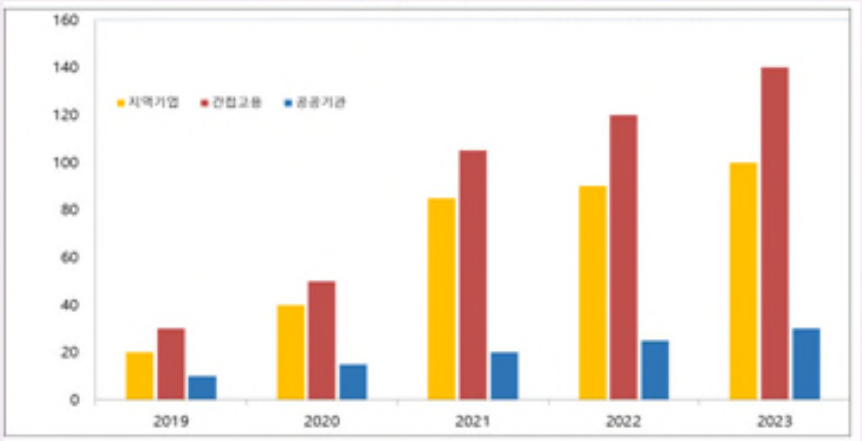
업체 상품 선정 및 기획 개발 지자체 차원의 홍보 및 판매

협의체를 통한 주후 관리 및 피드백

11.제안 SWOT 분석

12. 결론

경제 효과 (단위 : 억)



❖ 플랫폼 경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한 좋은 선례 확보

❖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이윤 창출

❖ 지역 내 문화적 통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감사합니다

드림 마이너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 Big Data Marketing을 통한 부산시의 관광활성화

동의대학교

강보석 손태규 정소연 이혜원

INDEX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1 부산 관광 산업 정책의 현 주소

2 Big Data를 활용한 부산 지역 관광 활성화

3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4 정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1ST 부산 관광 산업 정책의 현 주소

내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2ND Big Data를 활용한 부산 지역 관광 활성화

Big Data 수집

- GPS 자동활성화 기능
  - 빈문지 추적
- 설문조사
  - 위적 사항 및 만족도 조사
- 할인쿠폰 제공
- 지능형 관광지 추천 시스템

내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2ND Big Data를 활용한 부산 지역 관광 활성화

Big Data 수집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3RD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정책 1

'갈매기 버스'

- 주요 방문지를 추적하여 노선이 짜여진 버스
- 24시간제로 운영
-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3RD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정책 2

'비일상적 레저공간'

- 관광객들의 취향을 파악한 데이터 조성
- 사례 1 :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일본 레고랜드'
- 사례 2 : 부부 및 연인을 타겟으로 한 '세주 리브랜드'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3RD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정책 3

'갈매기 수상버스'

- 주요 해양관광지를 추적해 노선이 짜여진 수상버스
- 해양 관광 도시 '부산'의 특별한 관광상품
- 타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제도'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3RD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정책 4

'매력적인 도시 부산'

-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지역 개발
-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점, 관광 상품 개발
- 관광 소재가 취약한 곳에 이벤트, 전시, 공연 구축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4th 정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지방 자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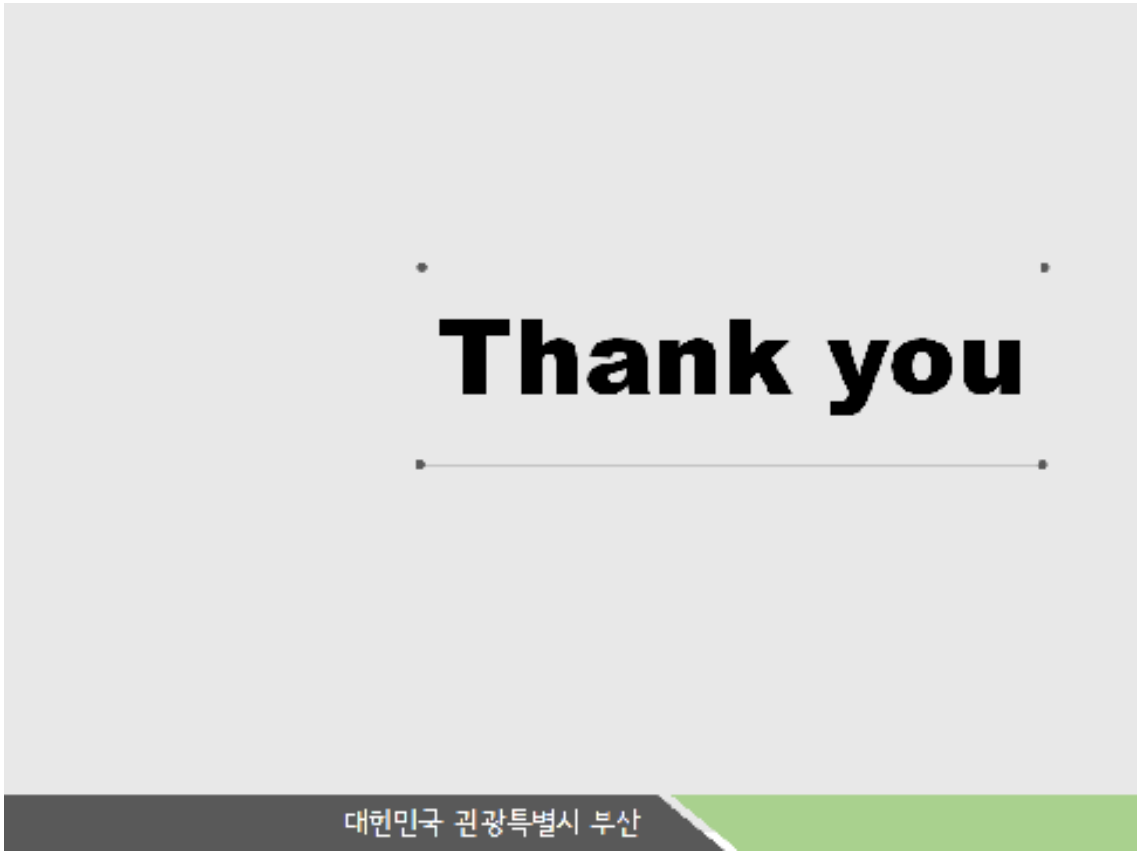
지역 상권 도모 Dynamic 타 지방 정부와 연계

BUSAN Asian Gateway

관광지 간 격차 해소

양질의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Thank you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지방의회와 주민의 소통제도

: 풀뿌리 자치 협의체를 통한 소통제도 개선방안 제시

팀원	조영현, 곽경수	부문	대학생부문
소속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지방의회와 주민의 소통제도

: 풀뿌리 자치 협의체를 통한 소통제도 개선방안 제시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영현, 곽경수

요 약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며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불만을 표시하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불투명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일까? 첫째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지나치게 크게 설정이 되어있어 의원 한명이 대표해야할 주민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의원 한명이 많은 수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소통제도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들은 다루는 문제사항의 범위가 크거나 참여절차가 까다롭고, 양방향의 의사소통이기 보다는 일방향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주민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풀뿌리 자치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풀뿌리 자치협의체란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협의기구로서, 주민들의 지역의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이를 소속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사이에 의사소통 통로가 되는 새로운 자치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자치기구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지방의회에 전달 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원들은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와 주민 간 '소통'문제점 논의

1) 지나치게 큰 지방정부의 규모

2) 소통에 부적합한 제도

① 주민참여제도

가. 주민투표제도

나. 조례의 재정과 개폐 청구제도

다. 주민소환제도

② 청원권

③ 공청회 및 간담회

2. 발전방향

1) 풀뿌리 자치 협의체 제안

① 풀뿌리 자치 협의체 개념

가. 풀뿌리 자치위원

나. 풀뿌리 관리관

다. 풀뿌리 자치원

② 풀뿌리 자치협의체 작동구조

가. 풀뿌리 총회

나. 이파리 회의

다. 풀뿌리제

③ 풀뿌리 협의체 참여촉진 방안

Ⅴ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118조 제1항[1]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를 두고 조례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결산, 행정사무 감사 등 중요한 활동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막대한 소임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더욱이 자치분권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 단 2개의 지방자치조항을 가진 현재의 헌법에서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한 헌법으로 개헌될 경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의회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만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미흡한 운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특히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관련된 미흡한 운영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지방의회와 국민[2]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5년	22.5	53.8	22.5	1.2
'14년	27.6	51.1	20.2	1.1
'13년	21.8	55.1	22.1	1

당 자료는 '13년도부터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7,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방의회와 국민간의 소통 수준을 면접조사를 통해 구성된 통계표이다. 지방의회와 국민의 소통이 '전혀 및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에 응답한 '15년도의 비율은 76.3%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와 지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표제를 채택하여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에게 입법권을 위임했지만, 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개헌을 통해 이루어질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민과 지방의회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1)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한국행정연구원,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지방의회와 국민"

못하는 현실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풀뿌리자치협의체’라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의회와 주민 간 '소통' 문제점 논의

1) 지나치게 큰 지방정부의 규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나치게 큰 지방정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규모가 너무 크다면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해야하는 주민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자신의 소속 구의 주민들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구역이 얼마나 광역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선진국의 자치구역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아래의 〈표-1〉은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수·인구·면적을 주요 선진국 기초정부의 수·인구·면적과 비교한 것이다.

〈표-1〉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평균 규모[3)]

구 분	기초정부 수 (개)	기초정부 평균인구 (명)	기초정부 평균면적 (km^2)
프 랑 스	36,763	1,743	15
스 위 스	2,715	2,762	15
독 일	14,805	5,452	24
미 국	39,006	6,623	240
스 웨 덴	290	31,240	1,417
일 본	1,772	67,313	210
한 국	230	210,870	423

위의 표를 살펴보면 남유럽국가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기초정부의 평균인구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하다. 프랑스·스위스·독일 등 대다수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우리나라 면의 평균인구인 5천 명 미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이 여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의원 1인당 대표해야 하는 인구수의 과잉으로 이어지는데, 특히나 기초의원보다 광역의회에서 두드러진다.

3) 안성호, 2010. 한국 지방자치체제 개편 동향과 발전방향, 한국연구재단.

〈표1-2〉 제7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행정자치부: 의원 1인당 인구수[4)]

	인구	의원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광역의원	51,677,054	794	65,084
기초의원	50,799,215	2,898	17,539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규모를 선진국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역도시화를 지향하는 추세로 오히려 지방정부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의 규모를 바꾼다면 그러한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재정적 부담 등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규모의 변화에 앞서 과도기적 단계로써 지방의회와 주민 간 소통의 부재를 보완할 통로가 필요할 것이다.

2) 소통에 부적합한 제도

우리나라 [5)]지방자치법 제 2장 '주민'에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관계에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의회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민들은 지방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그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① 주민참여제도

가.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13조에 도입근거 규정이 마련된 후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실행되었고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의 투표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는 주민들 모두가 투표권자 이므로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4) 행정자치부, 2016,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의원 1인당 인구 수"
5) ①지방자치법 제 14조 주민투표, ②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③지방자치법 제 20조 주민소환

가지고 주민들이 최고수준의 참여와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단지 투표를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투표권자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발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극히 참여가 제한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6] 또한 주민 전체에 대하여 시행되므로 소요되는 시간적인 문제와 경제적 부담 등에 의해 자주 실시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주민투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단 8건의 주민투표만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7]

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 역시 주민과 지방의회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주민이 활발하게 지방의회의 의정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구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 되어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를 공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 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듯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전달되기까지 중간 절차가 많아져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다. 소환투표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청구권자의 10/10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100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10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환이 확정된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참여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주민들의 대표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정치적·사후 책임적인 성격의 제도로서, 선출된 대표자와 소통을 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제도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6) 주민투표법 제 7조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7) 지방자치백서, 2015.12, 행정자치부, p171

② 청원권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 8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하면서 청원의 심사·처리 절차, 기타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청원권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그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인 의사표명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처리를 통한 주민과 지방의회 간 의사소통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현행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까지 17개 광역지방의회에서 총 48건이 주민들로부터 청원되었고, 그 중 32건이 처리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1개의 광역자치단체 당 2.8개만이 청원되었고 처리 건수는 체 2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8)]

③ 공청회 및 간담회

공청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이나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의회는 총 251회의 공청회와 8,84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현안사항 해결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9)]

그러나 공청회 및 간담회는 의사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의무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이를 개최하지 않으면 주민과 지방의회 간의 소통의 길이 묘연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주민 간 의사소통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거나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최 할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의 수단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제도들은 한 개인이 참여 조건을 구비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또한 참여제도들이 해결의 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자치단체문제 전반의 중대 사항을 다루는 큰 규모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8)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 지방의회 통계, http://clik.nanet.go.kr.
9) 지방의회백서, 2015.12, 행정자치부, p164

지역의 작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개진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에는 적합하기 않은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자치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2. 발전방향

1) 풀뿌리 자치협의체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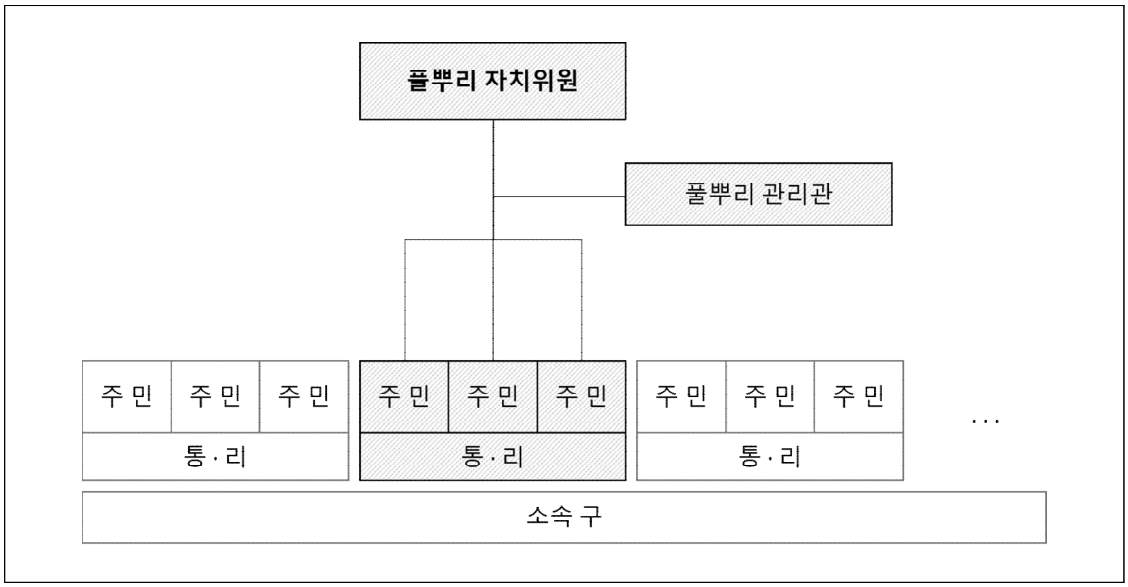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 대표해야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현실에서는 아직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통제도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한계점으로 주민의 소통 만족도를 높이기에 충분치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소통 수단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공동체와 그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협의체'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풀뿌리 자치협의체의 개념

'풀뿌리 자치협의체'란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된 지역 주민들의 가장 작은 회의체를 말한다. 풀뿌리 자치협의체에서는 정기적인 자치회의 개최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협의체에서 협의된 안건을 소속 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게 한다. 풀뿌리 자치협의체는 대표해야 할 주민의 수가 많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속 구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게 하고 주민은 평소에 만나기 힘든 자기 지역의 의원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므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다. 협의체의 단위는 주민들의 자치가 가능하도록 너무 크지 않은 통·리로 정하고,[10] 그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단절(김찬동, 2010,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에서는 "동사무소의 관할인구가 2만 명이라 할 때, 약 5000세대가 하나의 동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은 약 20개의 통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때, 250세대가 하나의 통을 이룬다."라 설명한다.

〈그림1〉 풀뿌리 자치협의체 조직도



가. 풀뿌리 자치위원

풀뿌리 위원이란 풀뿌리 협의체를 대표하고 '풀뿌리총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을 말한다. 풀뿌리 위원은 총 5명으로 1명은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또는 이장을 임명직으로, 나머지 4명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선출직으로 한다. 자치위원은 자발적인 참여로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고 해당 풀뿌리 협의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풀뿌리 위원들은 풀뿌리 총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안건들을 준비하고 논의 된 안건들을 정리하여 소속 구 의원들과 모여 이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풀뿌리 관리관

풀뿌리 관리관은 풀뿌리 총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공공행정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당 풀뿌리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참모기능을 하는 구성원으로 해당 구나 주민 센터의 공무원 2명으로 이루어진다. 풀뿌리 관리관은 주민들로만 이루어진 협의체에 공공영역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협의체의 존재와 기능에 공적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는 중간자로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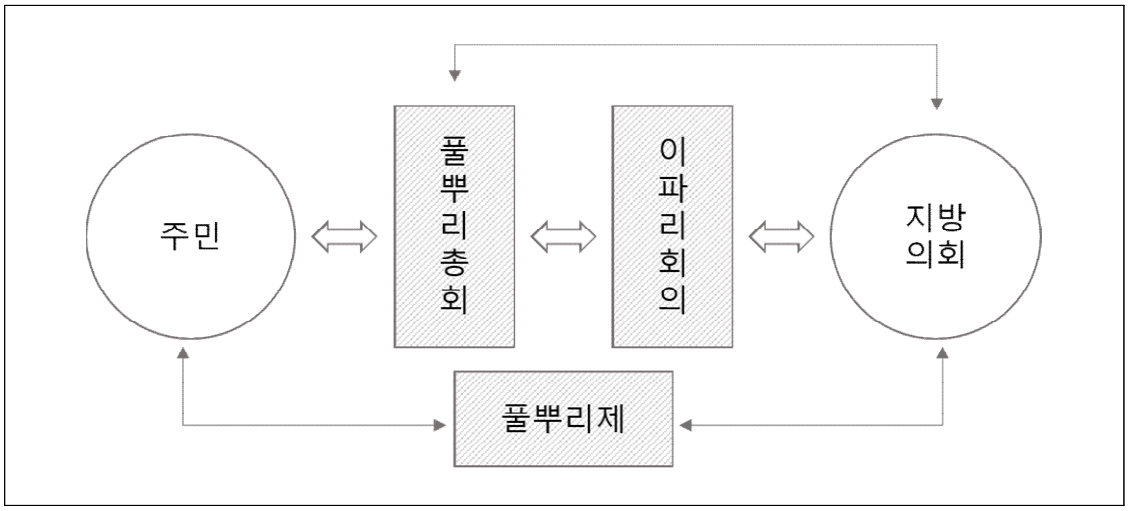
다. 풀뿌리 자치원

풀뿌리 자치원은 풀뿌리 자치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해당 협의체의 일반 주민들을 말한다. 주민들은 풀뿌리 총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권, 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 자치원

들의 대표자인 자치위원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과, 자치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풀뿌리 자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의지는 풀뿌리 자치협의체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② 풀뿌리 자치협의체 작동구조

〈그림2〉 풀뿌리 자치협의체의 작동구조도



가. 풀뿌리 총회

풀뿌리 총회란 풀뿌리 자치협의체의 구성원이 모여 자신의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건의사항, 발전방향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여 소속구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회의를 말한다. 풀뿌리 총회는 매달 한번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요구로 임시회를 개회 할 수 있다. 총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만 참여하는 자리이지만, 초청에 의해 소속구의 지방의원들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풀뿌리 총회의 개회일은 모든 주민이 참석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 하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스스로 정해 정기 개회일로 정하고, 총회에 필요한 장소, 비용, 기타 지원 사항들에 대하여는 해당 풀뿌리 관리관이 담당한다.

총회의 진행은 풀뿌리 자치위원이 이끌어 나가고, 관리관은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자치원들은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신의 발언만을 남발하거나 타인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치위원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총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자치위원이 정리하고 의견을 모아 소속 구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전달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만나는 '이파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 차 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풀뿌리 총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회의로서 미래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 이파리 회의

이파리 회의는 풀뿌리 자치협의체의 자치위원들과 소속 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만나는 소통의 장으로써, 자치위원들은 자신들의 풀뿌리 총회에서 모아진 안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실상 의원들이 대표해야 할 주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를 대표하는 자치위원들이 의원들을 직접만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리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의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소속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추후에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반영된 안건과 반영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위원들은 풀뿌리 총회에서 그 내용을 전달한다.

다. 풀뿌리제

풀뿌리제는 소속구 지방의회의원과 주민들이 모두 직접 모여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보고를 듣기도 하고 지역에 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실시 주기는 1년에 한번으로 하고 실시 기간은 그 해의 연말로 정한다.

③ 풀뿌리 협의체 참여촉진 방안

우선 풀뿌리 자치협의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풀뿌리 자치위원은 일반 자치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자치협의체 업무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자율의 의미를 위배할 수 있고, 주민의 대표라는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 일종의 심부름꾼의 지위로 전락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위원들에 대하여는 임기 기간 동안 적절한 수준의 적적한 세재 혜택 정도만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풀뿌리 자치원들에 대한 참여 촉진도 자치협의체의 성패를 좌우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치원들이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의지가 없고 참여가 저조하다면 자치협의체의 존재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협의체에서 실제로 실행된 안건 중 많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된 의견을 낸 자치원에게 자치단체차원에서 시상 등의 보상 제도를 마련·실행한다면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의 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의 주체들인 주민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지방의회는 모든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즉 주민들의 의사를 잘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소통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주민 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풀뿌리 자치협의체'를 제안해보았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앞서 풀뿌리 자치협의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여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학습의 장으로서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경험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도 대의제 기구로서 더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실시 된지 26년이 지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당당한 성년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표와 소통할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풀뿌리 자치협의체'의 도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갈 미래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지방의회와 국민”. (2015)

안성호, 한국 지방자치체제 개편 동향과 발전방향, 한국연구재단. (2010)

행정자치부,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의원 1인당 인구 수”. (2016)

김찬동,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단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지방의회백서, 행정자치부. (2015)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 지방의회 통계, http://clik.nanet.go.kr (2017)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

정 다 빈

- 시민부문(서울시 송파구)

지방의회로의 청년의 정치 참여

정다빈(시민부문)

<주제 요약>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의 부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에서의 청년들의 부재라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로 청년들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정치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내로의 참여 그리고 원외로의 참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원내로의 참여는 비례대표를 통한 청년할당제 도입, 공천심사에서의 청년가산점 등 제도적인 보장을 통하여 지방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원내 진입을 확대시키고 보좌관제도를 신설하여 청년 전문 인력으로서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외로의 참여는 SNS를 통한 소통 확대와 함께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지방의회와 지역청년들 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토론회와 포럼등과 같은 정보 공유의 기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서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의 지역 거점 대학교와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청년인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방의회로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로의 청년의 정치 참여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관심도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강화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공고화까지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Ⅰ. 문제제기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요소가 상호간 긴밀하게 결합된 것으로서 단체자치의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김향원 1991). 즉, 민주주의의 가장 하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만큼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한 지역의 정치적 장(場)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조절 및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영일 2008). 따라서 지방자치는 정치를 생활정치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들과 더욱 친숙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화와 함께 부활한 이후 약 20여 년의 세월동안 지역 간의 자치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갈등해결 및 지역발전 등 지방자치의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승희 2015).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저조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도 과거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다(이길환 2014). 즉,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정치효능감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적절하게 대표되어야한 다. 즉 지역내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적인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숫적인 대표성은 사회구성원의 비율과 동일하게 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년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전히 지방자치에서 청년의 자리는 부재하며 더군다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이익이 대의할 수 있는 청년대표자가 존재해 야한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정치에서 배제되어왔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정치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한다. 둘째, 투표와 같은 일회적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1] 즉, 기존에 배제되어있는 청년들이 정치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지방자치에서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1) 하세헌·윤이화. 2012.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국제정치연구』15(1) p.162

종합하자면, 지방자치과정에서의 청년의 부재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며,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의 이익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대의하거나 해결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들의 저조한 관심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뿐 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동시에 풀뿌리민주주의의 공고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부재

1. 지방의회의 청년의원 부재

민주화와 동시에 부활한 총 6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도입, 정당공천제, 여성할당제,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도변화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지니고 있던 여성대표성 및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하였으며, 민선1기 지방의회에 비하여 민선6기 지방의회는 세련되고 효율성이 확대된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의원의 부재이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역대 지방의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평균연령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모두 평균연령이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지방의원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았던 회는 의외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회:50.34세, 기초의회:50.21세)였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균연령이 역대 중에 가장 높았다(광역의회:53.39세, 기초의회:53.69세).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 청년의원의 참여는 더욱 저조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평균연령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최연소와 최고령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역 의회보다 기초의회에서 최연소의원이 3.3세 더 어리고, 최고령의원이 2.2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로 다양한 연령층의 의원들이 분포되어있음이 예측되며, 그만큼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에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원내진입이 수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 연령 비교

단위: 세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회			기초의회		
	평균	최연소	최고령	평균	최연소	최고령
1회	50.34	27	75	50.21	25	76
2회	50.55	32	75	50.44	28	72
3회	50.72	30	68	51.18	26	73
4회	50.95	29	73	50.73	26	77
5회	51.26	33	71	51.72	27	74
6회	53.39	28	73	53.69	27	76
총계	51.20	29.8	72.5	51.33	26.5	74.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참조

또한 지역 간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시되었고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연령분포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청년[2]의원의 비율은 약 5%로 넘지 못하며, 청년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각각 세종특별자치시(0.20)와 부산광역시(0.11)였다. 또한 광역의회는 청년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북도의 경우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모두 청년의원이 전무 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나, 세종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청년의원의 비율이 10%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캔터(kanter 1977)는 사회의 소수(token)가 어떠한 문화와 조직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의 15%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계수치(critical mass)인 15%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수의 이익과 요구는 묵시된다고 보았다. 즉, 지방자치에서 배제 되어있는 청년들이 의회 내에서 15%의 비중을 차지해야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비율은 임계수치인 15%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청년들의 대표성은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정치적인 소수자인 청년들의 이익과 요구는 중장년층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묵시되거나 원내에 진출한 청년대표자는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청년에 대한 기준은 상의하지만, 30대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30대 이하는 청년, 40대 이상은 중장년으로 분류하였다.

<표 2> 민선6기 지방의원의 지역별 연령 분포

단위: 명, 괄호는 비례대표를 나타냄

지역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30대이하	40대 이상	청년 비율	전체	30대이하	40대 이상	청년 비율
전국	705(84)	17(3)	722(81)	0.03	2,519(379)	88(19)	2,431(360)	0.04
서울	96(10)	1(1)	95(9)	0.02	366(53)	15(2)	351(51)	0.04
부산	42(5)	2(0)	40(5)	0.04	158(24)	15(5)	143(19)	0.11
대구	27(3)	2(0)	25(3)	0.07	102(14)	5(1)	97(13)	0.05
인천	31(4)	1(0)	30(4)	0.03	101(15)	6(2)	95(13)	0.07
광주	19(3)	0(0)	19(3)	0.00	59(9)	6(0)	53(9)	0.09
대전	19(3)	0(0)	19(3)	0.00	54(9)	2(0)	52(9)	0.03
울산	19(3)	0(0)	19(3)	0.00	43(7)	3(0)	40(7)	0.06
세종	13(2)	3(0)	9(2)	0.20	-	-	-	-
경기	116(12)	4(1)	112(11)	0.04	376(55)	16(5)	360(50)	0.05
강원	40(4)	1(0)	39(4)	0.02	146(23)	3(0)	143(23)	0.02
충북	28(3)	0(0)	28(3)	0.00	114(17)	0(0)	114(17)	0.00
충남	36(4)	1(0)	35(4)	0.03	144(25)	3(0)	141(25)	0.02
전북	34(4)	2(1)	32(3)	0.08	173(24)	7(1)	166(23)	0.04
전남	52(6)	0(0)	52(6)	0.00	211(32)	2(1)	209(31)	0.01
경북	54(6)	0(0)	54(6)	0.00	247(37)	2(0)	245(37)	0.01
경남	50(5)	0(0)	50(5)	0.00	225(35)	3(2)	222(33)	0.02
제주	29(7)	0(0)	29(7)	0.00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참조

이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청년인 의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즉, 청년의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청년의 대의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제안이나 면담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받아줄 대표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내에 진출한 청년의원이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원내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년 유권자들의 저조한 관심과 참여

1995년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

연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 유권자들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투표 참여는 저조한 상태이며, 전 연령대의 평균 투표율에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표 3>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고 이에 반하여 50대 이상의 투표율은 현격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장년층에 비하여 청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경험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3]을 분석한 고승희(2015)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가 저조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대의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주민의 수렴 및 참여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낮은 신뢰도의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령별 투표율

단위: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전체	68.4	52.7	48.9	51.6	54.5	56.8
만 19세	-	-	-	37.9	47.4	52.2
20대	52.8	34.2	31.7	34.0	41.5	48.3
30대	68.2	46.1	39.7	41.3	46.0	47.5
40대	77.6	62.4	56.2	55.4	55.0	53.3
50대	81.9	73.8	70.0	68.2	64.1	63.2
60대 이상	78.2	71.2	72.5	70.9	69.3	70.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투표를 통한 참여는 과거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중앙정치와 총선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더욱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청년들에게 관심 밖의 대상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에 대한 저조한 인식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성춘(2017)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선거의식 수준과 정치효능감 등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방의회에 대하여 청년들의 관심과 정치효능감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적 의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

3) 충청남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총 242명이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자들 가운데에 약 60%가 20대와 30대였다.

Ⅲ. 지방의회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의 부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의 청년들의 부재라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로 청년들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정치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회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직접적으로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청년 대표자를 확대하고 간접적으로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확대와 인식개선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이다.

1. 원내(院內)로의 정치 참여

1) 지방의원으로서 청년

우선적으로 청년을 대의할 수 있는 청년대표자가 지방의회 내에 있어야한다. 즉, 청년이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에 진입해야한다. 앞서 지방의원들의 연령을 연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방의회에서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의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그 수치가 심각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캔터의 임계수치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다수의 청년들이 지방의회로 진입해야한다.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에 뜻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원내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례대표를 통한 청년할당제의 도입이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5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여성할당제는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들의 원내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할당제를 통하여 청년에게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이 주가 되어 보수적이고 때로는 폐쇄적인 정치구조와 문화에서 청년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원내로 진출해야한다. 그리고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조직력, 그리고 정보 등이 뒤처지는 청년들에게 지방선거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결국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청년들에게 지방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최소

1명 이상의 청년후보자를 의무적으로 공천하거나, 임계수치인 15% 청년 할당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할당제는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있는 기존 정치인에게 반발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이를 최소화하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에 우선적으로 한정하여 청년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후보자와 후보자간의 선거경쟁으로 당선되는 지역구와 달리 정당의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비례대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선거과정과 경쟁 등 지방선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원내 진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작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년으로서 직능대표 및 소수자 정치참여 보장 등 비례대표를 통한 청년할당은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공천심사에서의 청년가산점 보장이다. 정당들은 대부분 공천심사에서 정치신인들을 발굴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치신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심사과정에서 청년인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점제도는 정당마다 상이하고, 정당 내의 공천심사위원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청년후보자에게 큰 혼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득표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내의 조직력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은 청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두어야 하며 공천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의 메리트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몇몇의 당내 고위당직자나, 기성정치인들에게 청년정치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치인에 대한 정당과 기존의 정치인들의 인식개선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개선은 청년의 정치 참여의 확대 외에도 당내, 그리고 지방의회 내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지방의회 보좌진으로 청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지방분권화의 확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의정보좌기구 도입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문원식 2014). 그러나 지방의회의 보좌관제는 예산 및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도입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제도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계 및 전문가들 역시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안 발의 및 예산 심의, 지방행정부 견제, 주민민원처리 등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좌관제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찬동 2010; 조석주·박기관 2010; 임영덕·신나은 2012; 문원식 2014 등).

이러한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이 지방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로 작용될 수 있다.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인력이 자연스럽게 확충되기 때문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하나의 직장으로서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보좌 인력으로서 원내의 진출은 자연스럽게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 보좌관을 통하여 지방의회 내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쉽게 도달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2. 원외(院外)에서의 정치 참여

1) 지역청년과의 소통창구 확대

우선적으로 지방의회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하여 지역의 청년들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지역주민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긴밀한 관계로서 접근이 용이하고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지방의회는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 청년정책, 지역행사, 지역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동시에 상호간 대화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와 청년 간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 확대이다. 청년들이 지방 자치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청년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민참여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주민밀착형 통합 공간[4] 의 운영을 통하여 마을연구소나, 열린 회의실 등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고양 주민자치 온라인 홈페이지(www.gojumin.go.kr)를 개설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지방자치에 참여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최성 2014).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측면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별로 청년자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합산하고 청년들에게 지방의회 내의 오픈된 공간을 제공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친숙함을 확대시키고 제공된 공간에서 청년들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방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지방의회와 청년간의 정보 공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과거에 비하여 지역별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와 포럼 같은 학술적인 행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청년간의 의견과 정보 교류의 장이 발생해야 한다. 토론회 및 포럼을 통한 지방의회와 청년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여타 정책토론회와 포럼보다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방의원들의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4) 서울시에서는 서울혁신파크(청년일자리허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은평상상허브(은평마을지원센터, NPO상상센터 등)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통합적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의회 내에서 상시적인 토론회과 포럼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의견과 문제들을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간접적으로 의정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이해관계자로서 청년의 역량 확보이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정치참여 개선방안들을 통하여 지방의회 내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빛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자체적인 청년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정치역량교육 및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정당과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정치인으로서 청년인력 풀(pool)을 확보하며, 청년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이해관계자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년들이 강한 관심과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지방회의 안과 밖으로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의회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지방분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본다.

2) 지역거점 대학교와 지방의회의 교류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 거점하고 있는 대학교와 교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성남시의회 등 몇몇의 지방의회들은 지역 내의 대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대학생과 지방의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국민대학교와 MOU협약을 통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실습프로그램은 2015년에 처음 실시되어 상·하반기에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활동지원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실무경험과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내의 대학(강남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평택대학교)들과 협력을 체결하여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가천대학교, 전라남도 화순군의회는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의 지방의회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토대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지역거점의 대학교의 교류방안은 지역 내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대학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청년인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인식을 개선하는 등 이러한 지역거점 대학교와의 상호 교류는 지방의회와 지역거점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들 모두에게 상호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기대효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청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은 이 시대의 자원인 청년들에게 달려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내로의 참여 그리고 원외로의 참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원내로의 참여는 제도적인 보장을 통하여 지방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원내 진입을 확대시키고 보좌관제도를 신설하여 청년 전문 인력으로서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외로의 참여는 지방의회와 지역청년들 간의 소통창구의 개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지역마다의 지역 거점 대학교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민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승희 2015). 따라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지방의회를 넘어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정착화 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구성원인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지방자치의 능력 향상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의회로의 청년의 정치 참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강화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이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고승희. 2015. “지역주민의 참여의식분석과 정책방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177-184.

김영일. 2008. “세방화 시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생활정치의 장(場)으로서의 지방의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1): 149-176.

김찬동. 2010. “지방의회 보좌인력 강화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김향원. 1991.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사회과 지역정체성교육.“『사회과교육』 24:50-60.

문원식. 2014. “지방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4(2): 1-21.

이길환. 2014.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부산 소재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분석.” 『공공정책연구』 31(1): 225-252.

이성춘. 2017. “정치참여의식이 시민의 정치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18(1): 395-405.

임영덕, 신나은. 2012. “지방의원 의정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소고.”『법학연구』15(3)
조석주, 박기관. 2010. “지방의원 보좌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10(3): 393-412.
최성. 2014. “고양형 시민참여 지방자치의 현실과 발전방향.”
『공공사회연구』4(2):5-35.
하세헌, 윤이화. 2012.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국제정치연구』
15(1): 157-182.
Kanter, Rosabeth Moss. 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o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s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965-990.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공모 대학생 부문

〈 에너지 분권화를 위한 FIT 제도 활성화 방안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지혜

차 례

제 1 장 제안 배경····· 2

제 1 절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2

1. 에너지 분권화····· 2

2.FIT와 RPS ····· 3

제 2 장 정책 현황 분석····· 4

제 1 절 중앙-지방 계획의 연계성 부족····· 4

제 2 절 시장 구조의 문제 ····· 4

제 3 장 정책 제언····· 6

제 1 절 거버넌스의 전환····· 6

제 2 절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 병행····· 7

제 3 절 ICT 기반의 수요 관리····· 8

제 4 장 결론····· 9

■ 참고문헌 ····· 9

주제요약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란 에너지의 중앙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 에 맞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에 FIT 제도[1] 가 도입되어 중소규모의 발전 사업을 활성화 하고 시민 주도적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일으키며 에너지 분권화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재정부담을 이유로 폐지되었고, 국내 에너지 정책은 RPS[2] 로 전환되었다. FIT의 순기능과 세계 에너지 선진국에서 매년 FIT 제도를 개정하며 발전 시켜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새 정부는 최근 RPS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소규모 FIT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제안서에서는 정부의 FIT 제도 재도입에 앞서, 과거 제도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배경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효과적인 제도 적용을 위한 시장구조와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1.거버넌스의전환

지자체 산하의 전문 에너지 기구를 설립하여 자율권을 부여, 중앙에서는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인’ 감사에만 초점을 둔 총괄 기구 설립,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

2. 다양한규제와인텐시브병행

발전원의 보급률에만 치중하는 수치적 규제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구조를 바라보고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에너지 시장 생태계’를 향한 정책 필요, FIT와RPS 병행

3. ICT 기반의수요관리

ICT산업[3] 과 접목하여 체계적인 수요관리, 시민 참여와 정책 공유를 통한 수요 관리,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된 에너지 사업 지원

[1] FIT(Feed-in Tar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2] RPS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
의무할당제(RPS)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3]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제1장 제안 배경

제1절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1. 집중화된 에너지 체제의 문제

최근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및 원전의 단계적 폐쇄 의지를 표명했으며, 지자체 내부에서도 탈원전 및 에너지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와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운동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제도적·재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해 에너지의 분산형 공급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가 혐오시설로 여겨져 지역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값싼 전기생산으로 산업발전을 고효율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목표에서부터 시작된 대규모 중앙 집권적 에너지 생산 체제에서 생겨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에너지의 중앙 집중이란 에너지의 발전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분리 및 집중되는 구조를 말한다. 수도권의 높은 에너지 수요 대부분을 지방의 에너지 시설에서 충족시키며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이 강요된 구조였다. 또한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집행되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거듭하면서 갈등관리에 따른 비용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갈등관리는 비단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의 오류가 아니라 에너지 정책 구조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수단으로 에너지분권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4] .

다음은 중앙 집중화된 국내 에너지 공급체제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이다.

⇨ 저비용 에너지에 대한 낮은 접근성, 세계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 에너지 공급 사각지대, 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지역간 불평등 심화

[4]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분산형 전력생산을 권고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에서도 지역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분권화의 핵심은 현재의 집중화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지역 곳곳에서 분산되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지역 민간 사업자와 시민주체인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통한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FIT와 RPS

본 제안서에서는 정부의 FIT 제도 재도입에 앞서, 과거 제도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배경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효과적인 제도 적용을 위한 시장구조와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 한 것이 바로 FIT(Feed-in Tarriff, 발전차액지원제도)이다(2002 년).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발전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시민발전소', '마을 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태양광 협동조합' 식의 시민 주도적 에너지 전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FIT 발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2000 년 4,125GWh 에서 2011 년 8,017GWh 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시장이 형성되고 지역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11 년에 재정부담의 이유로 폐지되었고, 이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도 FIT 제도 부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에 FIT 를 대체하여 RPS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가 전면 시행 되었다. 의무할당제(RPS)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5]인증서 시장을 통해 민간 에너지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9 개 에너지 공기업들은RPA 협약을 통해 '06 년부터 '11 년까지 6 년간 총 2 조 4,764 억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에 투자하기로 밝혔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 12 조의 5 제 2 항에 RPS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이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산업여건을 감안 하여 '12 년 2%를 시작 으로 ' 22 년 이후에는 10%를 달성 하되, 연차별로 초기 5 년간은 0.5%p 씩 이후에는 1.0%p 씩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다.

[5]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

◦ 문제는 이러한 인증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6 개 발전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GS EPS 등과 같은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라는 점에 있다. 이들 기업이 의무할당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확률로 일정부지에 집중된 대규모 발전 시설이 지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 2장 정책 현황 분석

제 1절 국내 법·제도 현황

1. 중앙-지방의 에너지 계획 연계성 부족

국내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 차 에너지기본계획 [7] 과 제 7 차 전력수급계획을 함으로써 계획이 수립되었다. 광역지자체는 에너지법 제 7 조에 따라 5 년 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중앙과 지역의 계획은 연계성을 가지며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에너지 계획의 경우 지자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일성, 일관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 반면 구각 계획의 경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는 에너지 부문 계획 및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고 지방은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금의 의존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만한 통계 조차 없는 일이 다반사이고담당인력이나 전문성도 부족하여 에너지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6] 현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서 인상계획 밝힘.

[7] 에너지 기본계획 : 국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2035년 기간의 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2014년 2월에 최종 공표했다.

2. 시장구조의 문제

우선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기조로 인한 문제가 있다. 국내 전력공급은 전력거래소가 수요 예측과 가동 순서를 정해주고[8], 발전사가 이에 맞게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 한전이 전기를 유통하는 구조이다. 2017년 3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9]' 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까지는, 발전소 가동 시에 가동하는 순서는 값싼 원료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전, 유연탄, LNG 순으로 발전소가 가동됐다. 따라서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시에는 대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원에 의해 전력이 생산되었고,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2011년 정부의 민간기업 전력 시장진입 장려책에 의해 LNG 발전을 주력으로 하여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은 가동조차 하지 못 하거나 40% 이하의 낮은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현 전력공급 체계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의 개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본력과 타 제품군의 영업망을 동원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자체의 문제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도모하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경우가 그 예이다. 미국, 독일 및 일본시장에서는 ESS 를 태양광발전과 접목한 설비가 대중화 되고 시장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국내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없이는 공정한 경쟁이 힘든 시장 구조 탓에 신 성장 동력으로써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ESS 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공급 체계에 적합한 에너지 기술이 시장을 통해 보급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 확대에 앞서 전략적인 시장구조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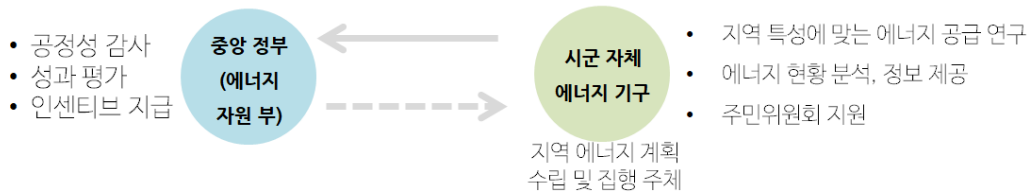
[8] 정부가 2001 년 4 월 2 일 도입한 변동비 반영 발전 시장 (CBP) 모델을 따른 것 이다 .

[9] **전력공급 순위를 정할 때 환경과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새 정부는 향후 LNG 발전설비 가동률을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장 정책 제안

제 1절 거버넌스의 전환 : 에너지 사용자가 결정하는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분권화 된 정책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의 하위에 있는 구조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접근에 한계가 있고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지자체 산하의 전문 에너지 기구를 설립하여 자율권을 부여하고 중앙에서는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인' 감사에만 초점을 둔 총괄 기구를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 산정 및 지자체별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중개 역할에 머물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별 에너지 공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지방자치위원회 검토 후 시행하고 에너지 정책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담 기구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자체 기구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삼을 것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선출에서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 각계 각층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대표의 경우 월급제 운영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하향식 시스템에서와 반대로 주민 자치회는 지역의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민자치센터를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공간으로 개선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 문제 현황과 그에 따른 의사 결정이 즉각 공공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절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 병행

FIT 의 제도 자체가 바람직한지의 논의보다는 활용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 FIT 제도는 RPS 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에너지 발전 규모에 따라 RPS 와 FIT 를 구분하여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 측면에 있어서 RPS 는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의 집중화된 발전시설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FIT 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 즉, RPS 가 FIT 를 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각각의 목표가 다름을 인식하고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정책과 인센티브 제도가 복합적으로 공존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RPS 와 FIT 는 둘 다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최종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가 다른 화석에너지와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보편화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초기에는 비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점차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기반의 정책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전력시장에 보급된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도, 시장기반 정책 메커니즘과 하부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발전원의 보급률에만 치중하는 수치적 규제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구조를 바라보고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 시장 생태계'를 향한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제 3절 ICT 기반의 수요 관리

과거 정부의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가동하지 않는 LNG 발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석탄화력 설비를 추가 건설하여 민자 발전사들이 적자를 거듭하는 동안 한전은 전력 도매가 하락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ICT산업[10]과 접목하여 체계적인 수요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정확한 수요를 통계화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뛰어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거의 100%에 달하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활요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을 확보하는 이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경제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 수요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합리적으로 소비를 줄인 후 지속가능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시민 참여와 정책 공유를 통한 수요 관리를 위해서 ICT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산업과 융복합된 에너지 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자족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 결론

FIT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최종적인 FIT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의 목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가 가격 이외의 '안전', '환경', '지속가능성'의 더 큰 가치를 포함하고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급량이 많아져 시장가격이 하락하기 이전까지는 FIT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지원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는 FIT를 계속해서 개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동시에, 이를 위해 본 제안서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10]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전환, 시장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병행, ICT 기반의 정확한 수요관리를 통해 분권화 된 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보 방법을 제안하였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 참여와 토론이 정책결정의 당연한 수순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한 세가지 내용 외에도 지역별 차등 요금제, 민간 사업자 지원책, 주민 수익구조 등 다양한 제도가 연구 및 시도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재경,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분권화의 과제”, 이슈&진단/ -(108), 2013., 1-25, 경기연구원
- 이유진,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의 틈새전략-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2016.,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손형진,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폐지와 의무할당제(RPS)의 도입” -2009,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 김유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차액규모 비교평가” -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 송용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2016, 한국경제연구원
- 016 신·재생에너지백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공모 (시민부문)

김성인(서울 영등포구)

요약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개혁과정에서 정부주도의 top-down식 개혁으로 인한 지방자치 침해와 경영자율성 위축, 공공성보다 효율성·수익성 강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공성, 공정성, 분권과 자치, 참여 등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신공공관리적 개혁기조는 퇴조할 것이 예상되나 지방공공기관의 재정 및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개혁과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공공기관 관련 정책제안들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을 통한 이윤추구 및 사업성분석이 개별 공기업별로 시행되었을 뿐, 다양한 환경 변수 관련 제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지방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경영평가에만 급급하여 단기적인 실적 달성에 치중할 뿐, 중장기적 경영목표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사례에 대한 제안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정책제안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를 검토하고 합리적 경영관리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사례를 조사하였고 경영선진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첫번째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두번째로는 법령 등 규제의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셋째로 기관 간 사업 및 기능 재조정에 의한 경영효율화에 관해 설명하였고 넷째로는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다섯번째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의 경영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Ⅰ. 정책제안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전국의 지방정부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출범시킨 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 기간에 부동산 경기의 활황이 있었고 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이 지역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그동안 부동산 시장과 사회환경, 거시경제 등의 많은 변화에 따라 현재까지 순조로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경영목표 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부문이 지역개발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시설물 관리(Facility Management)부문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신도시 조성,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과도한 사업확장을 지양하고 도시재생, 임대 및 주거복지, 공공시설물 조성, 마을만들기 등 지역개발 형태의 변화에 동참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사업 및 기능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지역개발, 도시철도 운영, 시설물관리, 환경자원 관리, 관광사업 육성, 지역상품 유통 등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나 최근의 흐름은 이러한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산하기관간의 통폐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게는 업무 효율성 추구, 크게는 지방재정 건전화 및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부문 등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분석 및 효율적·선진적 경영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본 정책제안은 각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재 추세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시사점을 포착하여 향후 지방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향할 재정·경영관리 측면의 합리적 방향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방공공기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정책방향

1999년에 지방공기업 설립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1998년 218곳 → 2008년 350곳 → 2016년 757곳으로 증가하였다. 개발이익의 환수를 명분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용인 등 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시도시개발공사 등이 중복 설립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채무 증가율(33%)이 자체수입 증가율(2.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행안부는 2009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1년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2013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2015년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등의 관리계획을 발표해왔다. 2009년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은 지방공기업 난립방지, 부실공기업 구조조정, 내부효율성 제고, 외부통제 및 감시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은 개별적 부채관리를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우발부채까지 관리하게 했다. 2014년에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출범시켰으며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이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으며 2015년 8월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이 발표되었다.

2015년 종합혁신방안은 제도혁신(설립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 및 절차 마련,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구조개혁(유사 중복 기능조정,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 부채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8월의 부채감축계획안은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고 개별적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종합혁신방안은 지방공기업 남설을 방지하고 부실공기업을 정리하여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간 기능조정은 내부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채감축계획은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청산권고의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되어 이행명령을 받을 경우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공기업 특성상 청산 중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원리금 지급 연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산권고를 받은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에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유동성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013년 2월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과 목적 달성도 제고를 이루도록 독려했다. 2014년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관설립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2016년 4월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통해 지방정부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단계부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엄격한 설립 협의를 통한 기관 난립 방지는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방만경영 사례와 원인

1)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설과 부실운영

서울시는 2016년 12월 에너지공사를 설립했고 올해 5월에는 메트로와 도시철도를 통합하여 교통공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 관광진흥재단, 120재단 등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고 문화재단과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충청남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시켰고 전라북도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신설되었고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통합되었던 인천관광공사를 재분리시켜 독립시켰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2013년 부채 3천413억원, 부채비율은 1만6천627%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처했다. 1천823억원을 지급보증한 태백시의 채무비율은 35.3%로 전국 평균인 15%의 두배이다. 2013년 설립된 부산관광공사는 매년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부산시가 5년간 현금·현물 등 800억원을 적자보전에 투입했다.

지방공기업의 민간영역 침범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013년 제스피(Jespi) 맥주를 출시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사업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취소를 승인했다. 부산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시기에 건립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지분 48%(72억원) 형태로 운영한다. 지방정부 출자기관이 민간영역인 골프장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1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인 경영부실도 심각하다. 감사원이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4차례 요구하여 시는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민영화를 반대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하여 세금만 낭비했다. 사업타당성분석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300억원을 차입해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감사원은 골프장 용역결과 내용을 지적했다. 결국 6년간 착공도 못하다가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서야 사업을 포기했다. 부지매입비용인 감정평가액 215억원보다 낮은 194억원에 토지를 재매각했고 차입금 이자로 33억8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부산시 상수도는 수돗물 유상판매를 추진하다가 민간 샘물업계와 갈등을 겪었다. 부산시는 1999년 순수 365라는 병입수돗물을 출시하고 판매를 두차례 시도했으나 환경부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했다. 현행법은 병입수돗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병입수돗물 판매는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 등에서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다.

2) 방만경영의 원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의 주체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진다.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부(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전안전부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경영평가를 받는다. 지방정부에서 출자하였으나 공기업이 아닌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경영평가를 수행한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경영평가를 통해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 평가등급이 부여된다. 경영평가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눈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되는데 지방공기업은 각 기관 내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할 정도로 경영평가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급의 차등 지급과 부실 공기업 판단 그리고 기관장의 경영능력 평가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체 부활과 설립권 이양 이후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기 시작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성 등을 핑계삼아 설립에 유리한 하나마나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장 뜻대로 기관을 늘려 전문성이 전무한 지자체 퇴직 간부나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지인과 참모들에 대한 보은성 논공행상을 반복해왔다. 정치논리에 따라 자리나눠먹기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낙하산인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는 자치단체장이 내정한 인물이 지방의회 주관의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자치단제장이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관을 평가받는 쪽에서 선정하다 보니 반대의견을 내는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실적을 쌓고 재선되기 위해 앞뒤 안가리고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자체 조직확대 수단 등으로 무분별하게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 유사기관 존재와 기관 간 업무중복 현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중 72%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으로 운영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인적구조로 인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지방공사 단일기관의 형태로 통폐합하거나 민간에 사업권을 이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성과를 극대화시켜야한다.

Ⅲ. 선진화 방안

1.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발생한 부채 등 재정상 문제를 채권발행 또는 지방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등으로 악화시

키고 있다. 산하기관의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하여 민영화할 사업과 지방정부가 참여할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현재의 사업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이 당해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추진가능함을 증명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자와 기업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익발생의 당위성, 공익사업이라면 부족한 재정의 보전계획 확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하기관들을 한 군데의 지방공사 산하 사업부문으로 묶는 등 조직과 업무영역을 조정하여 흑자와 적자를 상쇄시키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향후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광역상수도공사 검토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자치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지방공기업 설립도 재검토해야한다. 사업영역의 한계와 레드오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지역과의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각기 분산된 공공재산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한다. 일례로 공공재산인 국유지·시유지·구유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토지는 각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 등기소유권에 따라 각기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 토지들은 활용가치 재고를 위해 또다시 산하 지방공기업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LH 등에 관리와 개발이 위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재산의 관리와 가치증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법령체계 개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중 지방공단과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고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들 기관에 관하여 현재는 법률 상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태이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적 지원범위가 중첩되어 설립형태나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통합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 등 중앙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위주로 구성된 법령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코레일은 무임운송 적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전을 일부 받으나 지방메트로는 그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들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 산하 기관들은 법률 상 차별을 받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인 지방분권 강화와 아울러 법률상 차별요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3. 사업 및 기능 재조정

사업 및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선진화는 현재진행형에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34개 공공기관을 15개로 통폐합하였고 민영화, 폐지, 민간과의 경쟁도입, 기능조정, 정원감축, 출자회사 정리, 대졸초임 인하 등이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을 행하던 대한주택공사와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던 한국토지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이 있다. 출범 초기 LH의 막대한 부채가 연일 언론의 이슈가 되었지만 통합 이후의 꾸준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2016년 경영평가 B등급을 획득하였고 이는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기치아래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을 통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이 추진되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현재까지 상당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2조원 투입,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기업 부채가 이명박 정부 당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이 덜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선진화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부실공기업 통폐합, 설립기준 강화, 방만요인 제거 정책 등이 시행되었다.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통폐합 및 청산 등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선진화 정책은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기관 재조정은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양 기관은 상하수도, 부동산개발, 산업진흥, 농수산유통, 지역난방 등에서 업무영역 중복 및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 간 기능과 업무를 이양, 위탁,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하수도 간의 업무영역별 조정이 필요하다. 산업단지개발·주택공급 등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와 LH와의 기능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혼재된 공공재산 관리 업무범위도 조정되어야한다.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기능은 더 모호하고 유사·중복되고 있다. 광역과 기초 산하기관의 기능 재조정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산하기관 통폐합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와 통폐합 대상 임직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합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을 합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는 조례안

통과로 흐지부지 마무리 되었다.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실패한 것처럼 공공기관 선진화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당초 계획이 용이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이 첫번째 경우이다. LH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 단독 처리를 통한 관련법 통과로 가능했다. 반대로 여야의 초당적인 합치를 중요시하는 경기도지사의 의지로 금년 경기도 산하기관의 통폐합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건전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업 및 기능 재조정 추진 이전에 사업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론 수렴과정을 무시하고 졸속 처리되었으며 경기도의 산하기관 통폐합이 단 6개월의 짧은 외부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바와 같이 충분한 사전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향후에도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 선결되어야 한다.

4. 거버넌스 개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경영진단, 선진화, 경영컨설팅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위가 교수나 회계사출신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대변이 어렵고 행안부 결정사항에 대한 형식적 기구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소수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위 구성을 개편하고 회의자료 등을 클린아이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정치적 임용을 차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임원추천위원회 개편이 시급하다. 지방공공기관장 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관여할 여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비율 조정이나 고용자·주민이 참가하는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 위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 제도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5. 경영평가제도 개선

사기업과 달리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해야 한다. 청년고용,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기능인재, 고령자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경영평가가 기관장 업적 홍보를 위한 수단이나 성과급 배분, 지방공기업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경영평가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GDP, GRDP, 사회적 가치창출 등에 대한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구체적 수치상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생성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6. 운영 및 관리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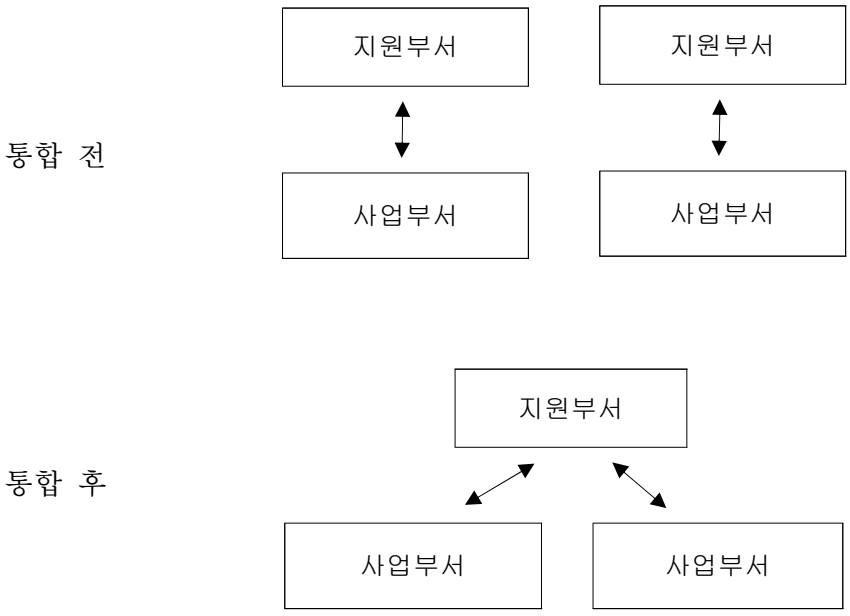
1) 패러다임의 전환

공공기관 간 통폐합 시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안락함을 추구한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민원에 시달리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기피하고 승진과 근무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원부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과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겠는가?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 및 재배치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이때 당해 기관장은 자신의 거취가 불분명해지고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직원들은 중복되는 인력으로 해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강력히 반발한다.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경우와 같은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원부서의 인력은 항상 남아돌고 지원자는 넘쳐난다. 반면에 사업부서의 인력은 항상 부족하여 비정규직으로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한다. 업무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 회사의 수익 원천 등에서 중요한 사업부서의 인적 구성이 이러한데 정부와 기관장의 경영목표가 일선에서 달성될 수 있겠는가? 미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부서이기주의, 개인편의주의, 무사안일 등이 누적되어 거시적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력의 조정이 있을 경우 지원부서의 인력을 사업부서로 배치한다면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사업부서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인사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사시기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승진시키고 인력을 배치하는 전근대적인 인사시스템은 이제 구시대의 적폐로 청산해야 한다. 사업부서 근무기간과 지원부서 근무기간, 기피업무 종사기간과 관리업무 종사기간, 격오지 근무기간과 본부 근무기간, 업무전문성 관련 교육·자격 및 학위 유무 등을 선진국과 같이 포인트화하여 계량화된 척도로 인사관리에 응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비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뿐만이 아닌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에도 적용되어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인력배치 모형



Ⅳ. 맺음말

정권교체 이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 우선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되어온 신공공관리 개혁과제였던 성과연봉제 폐지의 정책 타당성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이르다. 새 정부의 공약 중 한가지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공공성·자율성 강화 기조를 핑계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들이 또다시 남설되고 재정부실이 초래된다면 정부의 정책 시행 명분이 다시금 의심받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지방자치와 지역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본래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혁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중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재정 및 경영관리를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사회적 지표 등은 과거의 고도성장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장기적인 저성장을 예측하며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이 가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경영 목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인프라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개혁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명분을 확보한다면 정부와 주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선진화 과정이 공개되어 여론의 객관적인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창훈 외(2012.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영신, 허원제(2015.10),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윤(2015.10),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이 지방도시공사에 미치는 영향』, NICE신용평가
김성인(2016.12), 『지방공기업 공공개발 및 시설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시설관리학회
한인섭 외(2017.6), 『새정부의 국정과제 : 지방 공공기관 개혁』, 한국행정연구소

지방자치 · 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참가 구분	시민부분 / 팀(3인)	
참가자	성 명	이법성 강기룡 이명성
	주 소	울산시 남구
제목	『두드림!』 프로젝트	
아이디어 요약	“박근혜 정부로부터 드러난 우리나라 정치의 부패” 이런 참담한 결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지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잘못된 것은 스스로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활동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어도 참정의 방법을 모르고 속으로만 불편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잘못된 점과 제안하고자하는 것을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꿈을향해 스스로 두드려라“ 라는 의미로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중인 ‘부산민원 120’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주기적인 공청회를 개최, 제안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시장, 의원들과 함께 발전, 개선방안을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이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기사화시켜 시민 모두가 공유하며 의원들의 입법발의 과정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시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함께 자발적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현실적 입법발의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 · 분권실현 아이디어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합니다. 2017. 10. 14 성 명(대표자) : 이 법 성 (서명)		

지방자치·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두드림!』 프로젝트

Do, Dream!

두드려라!,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성 명	이 법 성 강 기 룡 이 명 성
주 소	울산시 남구

『두드림!』 프로젝트

Ⅰ. 운영제안배경

1. 제안배경
2. 운영필요성

Ⅱ. 운영활동계획

1. 운영형태와 절차
2. 프로그램 개요
3. 운영목적과 비전
4. 예산운영 계획

Ⅲ. 운영환경분석

1. 사회환경분석
2. 대상분석
3. 경쟁력분석
4. 분석결과의 시사점
5. 분석결과를 통한 전략

Ⅰ. 운영제안배경

1. 제안배경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 1조 2항

❍ 참정권(=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참정 불가능한 구조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듭니다.”

“정치인은 투표로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를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 드라마 ‘프레지던트’ 중에서

❍ 시민의 정치참여 방법 부재

❍ 스마트 폰 사용량이 PC 이용량 초과

◆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실시간 이용

❍ 정치인(국민의 대표)에 대한 불신주의 팽배

❍ 박근혜 정부(소통단절)의 몰락

◆ 최순실(비선실세) / 무식과 무능(세계적 망신살)

Ex) 박근혜 · 오바마 대북제제 관련 한미 공동 기자회견

- 포털사이트 박근혜 연관검색어 ‘무식’, ‘무능’, ‘수첩공주’ 꼬리표

◆ 고집불통(온실속 화초)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 소통단절

Ex) “대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5. 1. 12 / 신년구상 기자회견)

미궁에 빠진 세월호 7시간

➔ 그 결과, 젊은 층의 정치 관심도 및 참여의지 향상

❍ 문재인 정부(소통강조)의 비상

◆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방안 제시

◆ 공정하고 공개적인 투명한 정치 추구

◆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일이 박근혜로 인해 기저효과(=반사효과) 발생

→ 정치의 기준이 왜곡되어 올바른 정치의 기준이 파괴되는 사태 발생

2. 제안필요성

❍ 시민의견 제안 방법의 필요성 증대

❍ 시민의 소리 / 민심 파악

❍ 시민의 정치 참여도 향상(직접 참여) / 관심도 수치화 파악

❍ 비현실성 정책 ➔ 현실성 반영도 향상

❍ 시민주권 의식 고취 필요성

❍ 기존 운영중인 지자체 어플 활용도 저조

- 구색만 갖춘 무용지물
- 지자체 운영중인 어플의 존재 여부 미인지

<사진-1> 부산광역시 어플 '부산민원 120'

- 그나마 운영중인 어플 역시 사용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이용가치 떨어짐

※ 반면, 홈페이지를 통한 '부산민원120' 운영은 매우 양호함

<사진-2> 부산광역시 '부산민원120' 홈페이지

Ⅱ. 운영활동계획

1. 운영형태와 절차

❍ 명　　칭 : 『**두드림!**』 프로젝트

❍ 개　　요

◆ 어플을 통한 시민제안 및 시민의견을 수렴, 주기적으로 담당공무원과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공유·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이루고자 한다.

❍ 운　　영 : 부산광역시 핵심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팀 운영

◆ 시민소통관 소속 통합민원 담당관실에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
◆ 어플 '부산민원120' → '**두드림!**' 명칭변경 및 세부내용 전면 수정
◆ 시장 및 의원, 담당공무원과 시민토론회 개최
◆ 토론내용 기사화 및 후속조치 진행사항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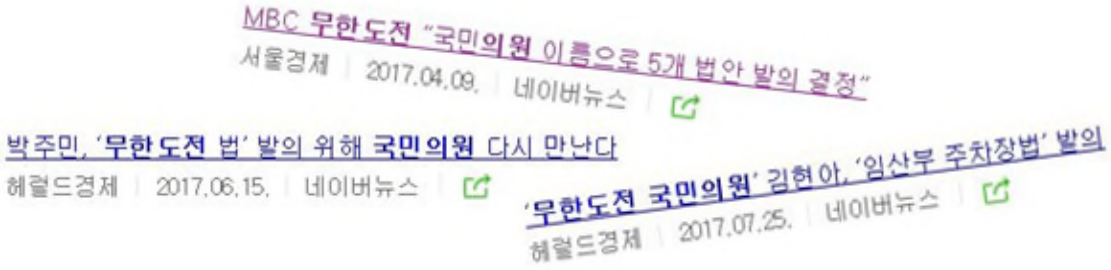
❍ 운영시기 :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

◆ 적합성 및 효율성 판단 등 충분한 분석과 준비기간 필요
◆ 3.1절 - 새로운 정치의 출범이라는 의미 부여
◆ 내년도 시 운영예산 편성, 집행

❍ 부가사항 :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

◆ 부산일보사(기사), 도시철도공사(광고) 외 기타 관공서 및 기업체 등

※ MBC 예능 무한도전 '국민의원'편 모티브



<사진-3> 무한도전 '국민의원' 법안발의 기사발췌

❍ 무한도전은 무한도전일 뿐, 무한도전이기에 가능한 이야기

◆ 자유한국당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해프닝

→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처사이자 시대흐름에 역행

◆ 무한도전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 +@

※ 국민 예능으로서 1회성 프로, 지속 불가능

<사진-4> 무한도전 '국민의원' 방송분

❍ 무한도전을 통해 국민의 관심도 향상

◆ 방송의 영향으로 입법발의 추진에 가속

❍ 현실은 무한도전이 아니기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예상됨

① 무한도전 방송당시 짧은 기간에 1만개 이상의 의견이 제시됨
반면, 이번 프로젝트는 초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가 예상됨

② 제시된 시민의견의 시행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Ex) 해당부서의 기존업무 수행으로 인해 지연, 업무수행 혼선 우려

❍ 무한도전의 성공사례를 인용

→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한 시민의견 접수 및 공론화 추진

2. 프로그램 개요

❍ 『두드림!』 프로젝트 프로세스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

분기별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 조회수, 좋아요, 추천, 댓글 등 종합

↓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 제안자 포함 시장 및 시의원(1~2명), 관련 부처 담당자 / 시민 누구나

↓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상품·상금 등)

☞ 공청회 진행중

↓

공청회 내용 및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로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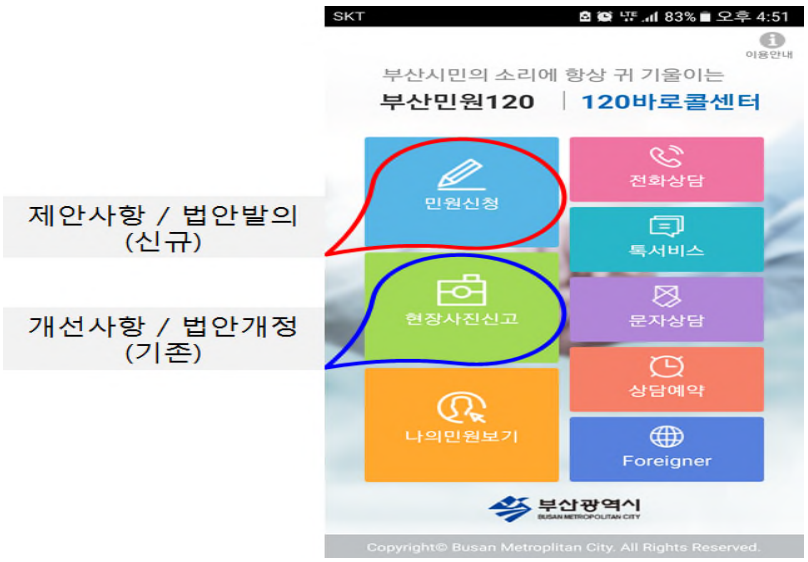
☞ 제시된 내용의 운영, 진행사항 또한 게시

↓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수정·보완)하여 해당의원 법안 발의

<표-1> 『두드림!』 프로젝트 프로세스 과정

1) 『두드림!』 프로젝트 어플 출시



<사진-5> '부산민원120' 메인페이지

2) 분기별 우수 제안(개선 / 제안) 각 3편 선별

◆ 제안된 의견의 조회수 및 좋아요·추천수·댓글 종합

3) 분기별 1회 공청회 개최

◆ 제안자 포함 시장 및 시의원(1~2명), 관련 해당 부처 담당자 입회

→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정보공유

→ 보완점 도출 등 시너지 효과 기대

※ 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참석 가능(질의·응답시간)

4) 선별된 제안자에게 소정의 선물(상품·상금 등)

◆ 공청회 진행중 시상

→ 시민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참여 동기 자극

5) 공청회 내용 및 결과 부산일보사 기사로 게시

◆ 제시된 내용의 운영, 진행사항 또한 기사화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진행 불가능한 사항 역시 공개하여 시정의 투명성 확보

6) 새로이 제시된 법안 및 의견은 적극 반영(수정·보완)하여 의원의 법안 발의

◆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보다 현실적인 법안이 될 가능성↑

※ 19대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경실련)

◆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 46.5건

◆ 한 건도 가결 못시킨 현역의원 : 73명

◆ 발의 건수 : 15,429건

◆ 가결 건수 : 1,084건

◆ 가결률(%) : 7%

◆ 발의 건수는 증가추세

≠ But, **법안늘리기 구태(꼼수)**

- 동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개의 법안 제출
- 동일한 법률안을 내용을 달리해 줄지어 제출
- 법안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법안 늘리기

<사진-6> 20대 국회 법안발의 10걸

☞ "양보다 질"이 중요!

☞ 시민의 대표이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모순

→ '**김영란 법**'과 같은 사회적 파장(역효과)을 가진 법안이 가결

☞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정의 기회 제공

3. 운영목적과 비전

1) 운영목적

- 시민의 참정권 확대로 보다 현실성 높은 법안 발의
- 시정운영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치를 견제장치
- 참정방법의 간편화로 참정기회 제공

2) 기대효과 및 비전

- 『두드림!』 프로젝트가 현 정부의 바람직한 정치상 제시
- 자발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부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적 시행 확대
- 지방자치의 기준 확립
- 선진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
-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주권 확립

4. 예산운영 계획

구 분	예 상 예 산 (만원)	기 타
어플 제작 · 운영	♦ 어플 제작 : 1,000 (최초 1회) ♦ 어플 운영 : 1,000	
광고제작	♦ 광고영상 제작 : 5,000 ♦ 광고전단 제작 : 5,000	♦ 부산출신 방송인 섭외 ♦ 리플렛 및 현수막 등
광고 · 홍보 (6개월)	♦ 옥외전광판 : 6,000 (시청제외 월 500만원) ♦ 사직구장 : 2,000 ♦ 대중교통 광고 : 3,000 ♦ 아파트 E/L : 3,000 (대당 5천원)	♦ 전광판 3개 (시청, 서면, 남포동) ♦ 버스 · 지하철 ♦ 1,000대 지정
상품, 상금(분기)	♦ 상품, 상금 : 1,200 (300X 4회)	♦ 공청회시 지급
관리자 채용	♦ 관리 · 운영자 : 6,000	♦ 전담부서 2인
기타 제반비용	♦ 기타 운영비 : 1,000	
총 예 산	**3억 4,200만원**	**첫해 예상 예산**

Ⅲ. 운영활동계획

1. 사회환경 분석

❍ 『두드림!』 프로젝트는 전 정부의 정치부패 및 실패를 반대하여 제안
- 일방적이고 단절된 민주주의를 답습하지 않고자 함

❍ 새 정부의 출범은 곧 정당교체의 과도기
- 구태의연한 시스템의 교체를 위한 최적의 시기를 의미

❍ 정경유착으로 인해 뿌리박힌 적폐청산 시기
-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 전 정부의 핵심인사와 삼성가 오너의 구속 등

❍ 시민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
-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2. 대상 분석

❍ 민주주의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무의미
- 350만 부산시민 모두가 대상
- 해양관광 수도 부산에 걸맞게 관광객의 목소리 역시 수용

❍ 7월 시정 평가 전국 최하위 (자료 : 리얼미터)
-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전국 최하위

❍ 7월 주민생활만족도 역시 17개 시·도 중 17위로 최하위 기록
- 전국 만족도 평균 : 57.3 (%)
  - **부산시 만족도 : 51.0 (%)**
- 전국 불만족 평균 : 35.2 (%)
  - **부산시 불만족 : 40.8 (%)**

→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시민 대부분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정해진 사회제도의 틀 속에서 생활함

→ 자신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나서줄 것이라 생각하며 방관하는 '방관자 효과' 팽배

<사진-7> 17년 7월 전국 시·도정 평가

3. 경쟁력 분석

❍ 스마트 폰을 통한 정보공유의 시대 도래
- PC이용보다 접근성 우수(시·공간의 제약 X)

❍ 참정의 간접성과 불편함 → 참정의 직접성과 간소화 가능

❍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팽배, 혁신 정치의 필요성 증대 시기

❍ 부산민원 120 '17년 상반기 이용현황
- 월평균 민원 수 : 7599.8건
- 월평균 제안 수 : 2004.5건
- 민원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동일 안건에 대한 중복 민원 대다수

→ 시민의 정치 관심도는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월 별	민 원(건)	제 안(건)
1월	6,760	2,066
2월	6,966	2,005
3월	7,319	1,982
4월	7,676	1,975
5월	8,221	1,994
6월	8,657	2,005
평 균(월)	**7,599.8**	**2,004.5**

1.1. <표-1> 부산민원 120 민원현황

❍ 현 '부산민원120' 운영구조 개선

구 분	현 운영구조	개선사항(예정)
민원사항	♦ 답변 및 조치상황 확인 가능 ♦ 기사화된 사건에 수십·수백개의 민원 요청	♦ 어플 실시간 알림 기능 ♦ 민원·진행·조치사항 100% 공개 ♦ 관심도에 따라 신문기사화
제안사항	♦ 답변 및 조치상황 비공개 ♦ 어플 내 확인 불가	
공통사항	♦ 비공개로 시민의 관심도 파악 불가 (조회수, 댓글 등) ♦ 민원, 제안 동일 내용 중복건 다수	

4. 분석결과의 시사점

❍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불신주의가 팽배하지만 여전히 방관자적 위치

❍ 정치참여의 욕구는 있으나 방법은 극히 제한적

❍ 현재 부산시에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산민원 120'을 운영
- ♦ 1:1 소통에 한정되어 시민 모두와 공유가 불가능한 구조
- ♦ 홈페이지 운영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어플 운영은 미숙
- ♦ 홈페이지를 통한 참정 관심도는 높음

❍ 정치참여의 접근이 쉽고 다양화되어야 함
- ♦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방안 촉구

5. 분석결과를 통한 전략

❍ **『두드림!』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청회와 기사화로 입법발의**
- ♦ 시민의 제안을 수렴하는 방법은 여느 지자체서도 시행중
- ♦ 한 단계 더 접근해 공청회를 통한 입법발의까지의 과정이 필요

❍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내 의견을 모두에게 공유하여 '브레인스토밍' 효과를 창출

❍ 공청회를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분기별)
- ♦ 불일정한 공청회로 관심도 저하

❍ 부산시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광고 제작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율을 높임
- ♦ 부산시 연고 기업들의 전폭적 지원 유치(롯데, 부산일보사 등)

❍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론화를 위한 공식 기사화
- ♦ 시민의 알권리와 내용공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 ♦ 공청회의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비로서 공신력 발생

제 2회 지방자치 분권실현 정책 공모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기업 상품 판매 및 판촉 공간 지원 사업 '고유 (Go You)'

<공모 내용 :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발전>
부문 : 대학생

팀 드림라이너 <팀원 정보>

팀장 이름 : 백 승 권
대학교 : 전북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팀원 이름 : 백 승 현
대학교 : 전남대학교 의예과

제 2회 지방자치, 분권실현 정책 제안 공모 요약본

아이디어 명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기업 상품 판매 및 판촉 공간 지원 사업 '고유 (Go You)'
아이디어 개요	○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사업 지원단과 창업 기업들에게 **온, 오프라인 판매점**을 제공해 부족한 판매 및 판촉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수명을 늘려 창업과 고용을 독려하자는 아이디어

1. 제안 배경 및 아이디어 목적

▣ 제안 배경

○ 플랫폼 경제 시대가 오면서 사회적 공유 공간의 재해석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지역적 특색과 상품들의 결합이 요구 되고 있음.

○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센터들의 상품의 판매 및 판촉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활용해 관광지로 만들어낸 사례가 부재함.

▶ 지자체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 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산업, 지역기업, 공공기관을 어우르는 사회계층이 여러 이익을 함께 창출해내고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필요함.

▣ 목적

○ 문화 공간부터 경제와 문화를 망라하는 상업센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조성

○ 비즈니스와 문화 산업에서 관광산업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계되는 공간 프로젝트> 실행

2. 아이디어 내용

○ 본 제안 내용

본 제안은 현존하는 각 지역 내 창업 기업단과 문화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을 특화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주는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토록 해, 비교적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창업 기업들을 사업 대상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하여 관광지이자 상업적 중심지로서 발전시켜 지역 이미지 재고와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하고자 함. 즉, 공유 공간 플랫폼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

- 단,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타 사업처럼 스타트업 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사업자 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창업 기업과 협업의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혜택을 보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함.

○ 사업 도식도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5 단계
거버넌스 구축		상품 판매		이윤 창출		이미지 재고		환류 및 발전

3. 아이디어의 기대효과

① 플랫폼 경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여 다양한 추후 정책 개발 및 세원 확보
② 지역 내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
③ 지역 내의 문화적 통일성을 강화해 관련 산업 증진.

공유 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기업 상품 판매 및 판촉 공간 지원 사업 '고유 (Go You)'

1.아이디어 개요

-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사업 지원단과 창업 기업들에게 **온, 오프라인 판매공간**을 제공해 부족한 판매 및 판촉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수명을 늘려 창업과 고용을 독려하자는 아이디어로서 거버넌스가 제공하는 '공유 공간 플랫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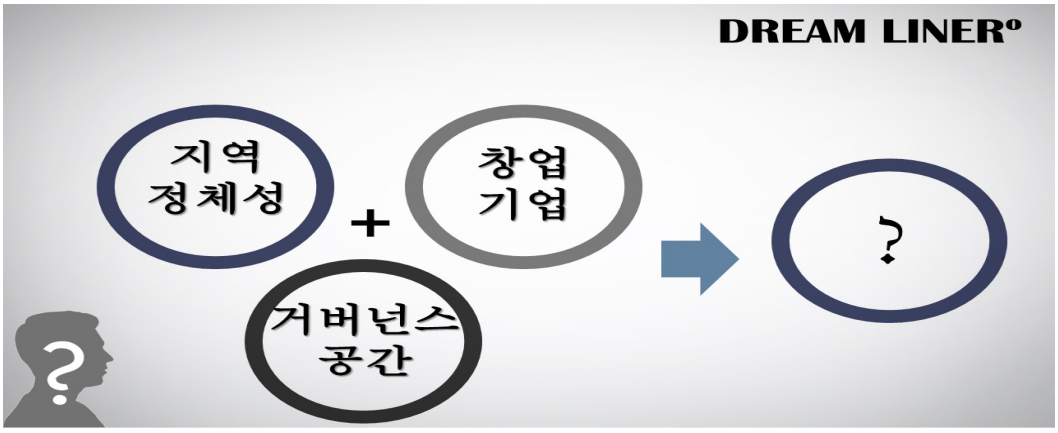
- 기존의 각 지자체 사업과의 차이는 지역 내 규모 있는 기업들 역시 일부 참가시켜 상업적 중심지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정체성도 찾는 것.

지역에 기업투자와 기업 수명 연장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한 『지역 연계형 사업 고유(GO YOU)』

1) 본 아이디어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바뀌어가는 사회 속에서 지방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함.

2) 직접 중소기업들이 본인의 상품을 판매 및 판촉할 수 있는 공간적 장소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마련하여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와 결합함.

3) '우리의 것'이라는 뜻의 고유와 '너에게 간다'라는 뜻의 Go you의 결합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네이밍



<본 사업 아이디어 영감 도식도 >

▶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역으로부터 좋은 상품 디스플레이 기회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마련해 지역 경제효과 상승을 기대하는 것.

2. 현황

- 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지, 지역 제품 홍보관, 문화산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의 필요가 제기.

○ 플랫폼 경제 시대가 오면서 사회적 공유 공간의 재해석이 진행되고 있음. (한겨레, 2017,09,14)

- 경북 사회적 경제 학교, 경기도 주식회사 , 부산시 등의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공유 공간의 재해석이 시도됨.

○ 지역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지역적 특색과 상품들의 결합이 요구 되고 있음. (2016 캐릭터 산업 백서)

○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센터들의 상품의 판매 및 판촉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활용해 관광지로 만들어낸 사례가 부재함.

3. 제안 목적

- 본 아이디어 제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내 기업들의 생태계 흐름 및 관광 동선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공간 확보

② 청년 창업 기업들의 판매 및 판촉을 지원해 좋은 사례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함.

③ 지역 문화 산업과도 연계해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역할 또한 부여.

▶ 지자체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 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산업, 지역기업, 공공기관을 어우르는 사회계층이 여러 이익을 함께 창출해내고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가 목적.

○ 문화 공간부터 경제와 문화를 망라하는 상업센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조성
○ 비즈니스와 문화 산업에서 관광산업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계되는 공간 프로젝트>

<로컬 기업이 관광지이면서 수익을 낸 사례> < 판매 공간이 관광지로서 발전한 사례>

<완주 로컬푸드>	<스타벅스 시애틀 1호점>
완주로컬푸드	

4. 제안 설명

○ 선행 성공 사례

1)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버넌스가 만드는 플랫폼형 거버넌스 '경기도 주식회사'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력이 있음에도 디자인이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 다양한 창업기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해 입주시켜 판매 및 판촉 지원. 그러나 대기업 배제와 각 업체별 판매망 공개라는 단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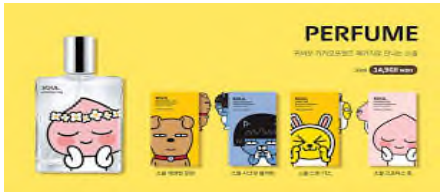
경기도 주식회사
G 경기도 주식회사 KOREA GYEONGGIDO COMPANY

▶ 본 아이디어에서 주목하는 성공 사례,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배제성과 문화기업이나 로컬 기업 등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고, 각 기업의 보안등을 강화해야함. 이를 보완해 적용하고자 함.

2) 캐릭터마이징 사업

- 쿠마몬 : 일본 쿠마모토 현의 캐릭터. 공공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둠. 지역 기업들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원한 좋은 예.

- 카카오프렌즈: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 OEM과 캐릭터 라이센스 판매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며, 동시에 타 업종 사이의 협업 제품들을 만들어 이미지 개선과 이윤을 창출 중에 있음

카카오 프렌즈 협업 상품	쿠마몬
	

▶ 위 두 문화 사업을 본 제안에서 참고 하고자 함.

○ 본 제안 내용

- 본 제안은 현존하는 각 지역 내 창업 기업단과 문화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을 특화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주는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토록 해 비교적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창업 기업들을 사업 대상자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관광지이자 상업적 중심지로서 발전시켜 지역 이미지 재고와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하고자 함.
- 단,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타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자 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과 같은 경우는 창업 기업과 협업의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혜택을 보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함.

○ 기존 아이디어와의 차별점

① 경기도주식회사와의 차별점

- 경기도 주식회사의 청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운영방식은 벤치마킹 하되, 본 제안에서는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사업 진행.

②기존 지자체 명품관들과의 차별점

- 기존 지자체 차원의 명품관은 단순히 특산품 위주의 판매점인 반면, 본 사업은 지자체 내의 지역 기업들의 상품들을 모아 판매하여 관광지이자 직접 판촉 및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③ 쿠마몬과의 차별점

- 쿠마몬의 경우, 지역 브랜드 상품에 기업들의 지역적 특성을 입힌 좋은 경우, 그러나 요새 화두인 온라인 판매점이 부재하고 콘텐츠가 한정적임.

○ 판매점의 공간적 개념

① 기존 정책과의 조화	'고유'의 공간적 개념은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② 도시의 정체성	문화적 통일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도시의 정체성과 그 궤를 같이함.

- 판매점 내의 주류 사업 기업은 창업 기업으로 한정하되,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지역 중기업 이상 중 사업자 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 한해 본 사업에 참가를 가능토록 함. 단 이들의 참가는 협업 형태로 창업 기업과 협업 기획 상품으로만 한정.

○ 온, 오프라인 판매점

- 지역 기업 활동을 온 오프라인에서 지원함.

① 오프라인 판매점

- 지역 내 관광지 및 문화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오프라인 상품을 판매토록 함.

-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상품 판매를 통해, 관련 사업 아이템 희소성을 통한 수익성 확보

해당 매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오리지널 상품 (스타벅스 시그니쳐)

② 온라인 판매점

- 현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 품목 제외)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고, 홍보 및 지역 활동 참여 독려 등의

1석 2조를 노리는 공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을 활용. 그러나 기존 지자체 사업처럼 특산물 상품 판매 위주를 넘어야함.

◌ 판매 상품 예시

- 위와 같이 온, 오프라인 상품에서 판매하게 될 상품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내 특산품과 창업 기업 상품의 결합

- 각 지역 내 유명한 특산품과 지역적 문화 상품을 결합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예시: 천안 호두과자 등 지역 특색적 상품과 창업 상품의 결합 , 단 이는 지역 내 관련 기업으로 한정)

천안시의 유명한 특산물로 유명한 호두과자 + 창업 아이디어 = ?

② 지자체 내 청년 기업의 상품과 캐릭터 상품의 결합

- 각 지역 내 존재하는 창업 지원단 내 청년 창업자들의 상품 중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과 문화 상품을 결합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도록 함. (예시: 드론 + '지역캐릭터')

드론 + 지역 캐릭터 = ?

○ 사업자 선정

- 본 사업에 필요한 각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공헌한 대기업이되 B2B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정 (ex 효성, 현대상용차 등) 협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엄격히 정해야함. (소매 업종 규제)
중소기업	지역 기업. 그 중에 지역 출신 기업가에게 우선순위 부여.
문화산업	문화산업종사자의 개념은 문화산업 내에 있는 모든 종사자
공공기관	부지의 주인인 기초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입안하여 연계.

○ 사업 활성화 전략

① 관련 상품 쿠폰 및 기프티콘 발행

- 관련 기프티콘 및 쿠폰을 활용해 홍보

② 인터넷 조회 수를 통한 홍보 인센티브 제공

- 온라인 홍보활동을 활발히 한 기업들에게는 추가 혜택 제공

③ 지자체와 중앙 언론사를 활용하여 캠페인 진행

-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홍보

영향력 있는 지역방송 SBS

SBS

④ 유명 TV 프로그램에 관련 캐릭터 상품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함.

- 유명 예능 프로그램 등에 관련 상품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함 (지자체 차원의 의지 필요)

예능 프로그램 활용 (예)

⑤ SNS를 활용한 희소성 전략 활용

- 각 상품이 가진 희소성 전략을 활용하여 상품 판매

희소성이 화재를 불러일으킨 마케팅 사례: 한라산 소주

○ 제도적 보완 방안

①지역청년고용할당제	입주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지역 청년을 고용 보장하는 제도를 채택 -지역청년 고용할당제를 통해 기업의 경우, 지역 청년 쿼터를 50퍼센트 까지 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70퍼센트 까지 유지함. ※ 지역 청년이란, 지역의 고등 교육기관을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을 의미
② 고용안정성 보장	지역 고용 안정성 보장 필요.→ 적어도 업체는 근무 인력을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을 전 인원의 30퍼센트 이상 의무 채용.
③ 지방세를 지자체에 의무납부	소득세나 지방세를 서울에 납부하게 된다면 지역의 경제는 고사하게 될 것. →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업이든지 특혜 없이 그 부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세금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반드시 지자체의 재정으로 들어가도록 함. ex) 광주광역시 신세계 백화점 (광주시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선례)
④ 지역에 대한 봉사	당근과 채찍 전략 → 기업 이미지 재고와 지역과의 화합 강화. ex) 연탄 봉사 , 지역 대학생 장학금, 인턴 지원 사업 등 지역 봉사

○ 실행 계획

- 본 제안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① 지자체, 시민 협의체를 통한 사업 선정 및 구체화

② 협의체를 통한 입점 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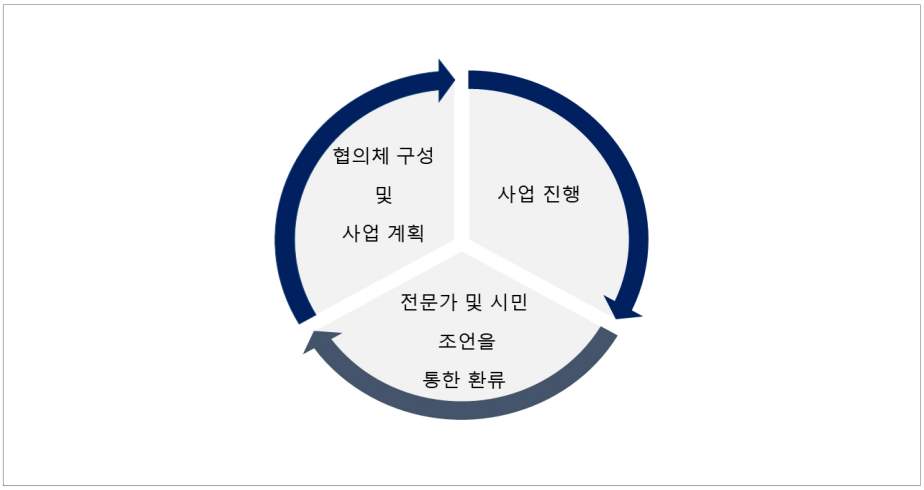
③ 온, 오프라인 매장 관리 업체 및 부지 선정

④ 업체 상품 선정 및 기획 개발

⑤ 지차체 차원의 홍보 및 판매

⑥ 협의체를 통한 추후 관리 및 피드백

▶ 환류를 통해 꾸준한 제도 보완.



<환류 도식도>

○ 참여자 유인 요소

① 대기업	오리지널 상품 개발 및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대감 상승 효과. 기존의 아이템 중에서도 괜찮은 아이템들을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 재고
② 1인 기업 및 중소기업	판매 및 판촉 활동 공간 확보 및 사업 성장 가능성 확보
③ 대기업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있는 공간에서 구직 활동 가능
④ 중앙정부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화와 세수확보
⑤ 방문객 및 관광객	지역 내 특화된 상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문화 향유

○ 사업 도식도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거버넌스 구축		상품 판매		이윤 창출		이미지 재고	

5 단계
환류 및 발전

<사업 도식도>

①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의 거버넌스 구축

② 상품 판매를 통한 경제 효과

③ 이윤 창출을 통한 직,간접적 고용효과 발생

④ 지역 이미지 재고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⑤ 환류를 통한 발전 기획으로 지속적 사업 내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예산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음.

① 세금(65%)- 국비 50%, 지방세 50% (정부 차원 사업이므로 국비활용.)

② 투자비(35%)- 입주 기업 투자비

○ 제안 SWOT 분석

<제안 SWOT 분석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지역 내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만족	기존 성공사례의 부재.
THREATENS	기업들의 수익 구조	판매율 저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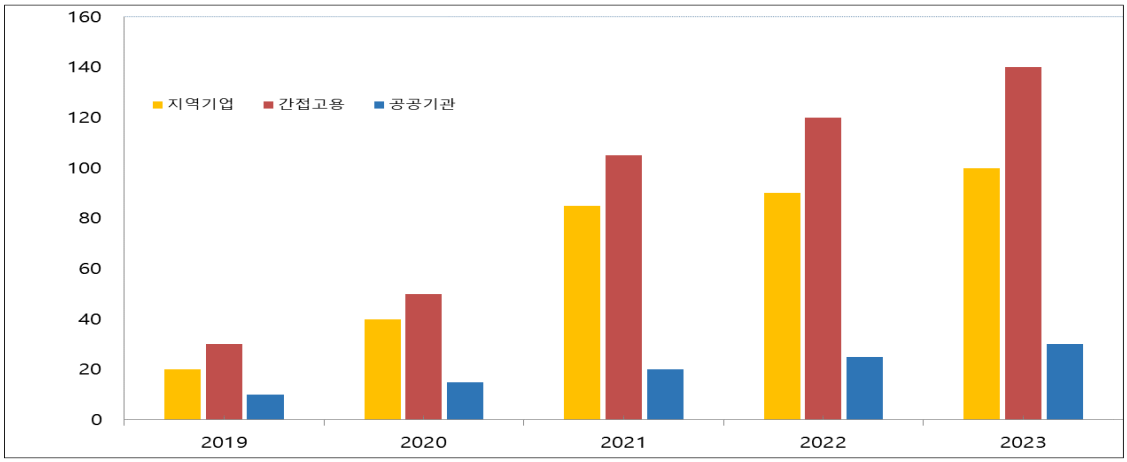
▶ 상업성만 확보 된다면 관련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아이템임.

○ 사업 5 개년 계획

- 본 사업의 5 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①1년차, 2018년	공공 기관 및 창업 일자리 창출 / 민관 거버넌스 구축
②2년차, 2019년	창업 기업 고용 및 사업 시행 인력 간접 효과 / 본 사업 시행
③3년차, 2020년	간접적 경제 효과 확대 / 사업 본 궤도화
④4년차, 2021년	지역 내 관광지이며 상업 중심지로 발전 / 사업 성숙
⑤5년차, 2022년	타 기초 지차체와 협업 및 광역 지자체 단위로 확장 / 사업 확장

<기대 일자리 수 증감표(단위: 명)>



- 본 수치는 통계청 자료 내 기업 체 증가 수 및 종사자 증가율을 근거로 산출(누적),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 필요.

5. 기대 효과 및 결론

○ 발생 경제 효과

- 본 제안이 가져오게 될 일자리 수는 다음과 같다.

	고용 인력 수	비율
참여 기업	110	약 40%
간접 인력	150	약 50%
공공 인력	30	약 10%

○ 기대 효과

-본 사업 '고유 '는 1인 기업과 중소기업 이라는 생산주체와 지역 주민, 관광객이라는 소비 주체의 이익과 편의까지 도모하는 쌍방향의 사업이다. 본 제안자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① 플랫폼 경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여 다양한 추후 정책 개발 및 세원 확보
② 지역 내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
③ 지역 내의 문화적 통일성을 강화해 관련 산업 증진.

▶ 본 제안은 이처럼 지역 기업, 지자체,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지방자치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공간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본 아이디어를 제안함.

지방자치 • 분권실현 정책제안 공모

- 대학생 부문 -

대한민국 관광특별시 부산

: Big Data Marketing을 통한 부산시의 관광활성화

목차

SUMMARY

1. 부산 관광 산업 정책의 현 주소 1
2. Big Data를 활용한 부산 지역 관광 활성화 3
3.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7
4. 정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12

작성 : 강부석(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손태규(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이혜원(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정소연(동의대 정치외교학과)

< Summary >

지방정부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인 '관광산업', 그리고 현 부산 관광 산업의 한계

- 수요가 높은 관광지들을 연결한 편리한 통합 교통수단의 부재
- 관광객의 취향을 고려한 테마형 시스템 부족
- 해양 관광 도시만의 특색을 살린 해양 관광 시설 부족
- 발달된 관광지와 낙후된 관광지 간 격차의 심화

APP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능 중 하나인 'Big Data' 수집

- 부산시에서 제작한 기존 APP인 '부산투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켜 'Big Data' 수집 도구로 활용
- 개인정보이용 동의로 개인정보보호의 한계성을 극복한 후, 설문조사 및 GPS를 통해 대량의 'Big Data'를 수집 • 분석하여 관광 정책에 활용

<데이터 수집과 정책 파생 과정>

'Big Data'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정책 제안

- 관광객 수요가 높은 방문지를 기반으로 한 노선을 개발하여 '24시간' 버스 운영
- 친구, 연인, 가족 또는 연령대별 방문지를 추적해, 각각의 방문지에 관광객들의 취향에 걸맞은 테마형 시설 도입
- 해외 수상버스의 선례를 벤치마킹한 부산만의 독자적인 수상버스 개설
- 접근성이 낮고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체험형 테마파크 건설

정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 관광 상품 개발로 부산만의 독자적 자본을 확립해 지방 자치 활성화에 기여
- 수집된 데이터로 타 지방 정부와 연계 가능
- 접근성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의 상권 도모 및 관광지 간의 격차 해소
- 양질의 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1. 부산 관광 산업 정책의 현 주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부산시 관광 정책의 한계

계속적인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관광 정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부족

(1) 관광객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의 부재

부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가 존재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임

'해동 용궁사', '황령산 봉수대', '렛츠런 파크' 등 접근 편리성이 낮은 관광지는 전년에 비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표 1> 2016년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수

(단위 : 만명)

주요 관광지점	2016년	2015년	증감비	주요 관광지점	2016년	2015년	증감비
서면일원	1,594	1,540	3.5%	송도해수욕장	174	172	1.2%
BIFF광장, 용두산공원	1,287	1,230	4.6%	아미산전망대	151	115	32.1%
자갈치·국제시장	1,132	1,065	6.2%	송정해수욕장	146	146	0.2%
해운대해수욕장	1,091	1,079	1.2%	흰여울문화마을	136	127	7.2%
전포카페거리	849	766	10.9%	렛츠런파크	129	143	-10.2%
센텀시티 일원	776	693	11.9%	다대포해수욕장일원	118	90	31.7%
동백섬&누리마루 APEC하우스	563	629	-10.5%	국립해양박물관	103	82	26.3%
광안리해수욕장	546	531	2.8%	오륙도&이기대	89	81	9.3%
마린시티카페거리	430	465	-7.6%	황령산 봉수대	88	103	-14.4%
부산시민공원	329	332	-1.1%	태종대	78	94	-16.7%
민락수변공원	290	353	-17.7%	해동용궁사	69	83	-17.2%
감천문화마을	255	239	6.8%	을숙도	33	27	22.8%
달맞이고개	188	185	1.4%	범어사	12	14	-13.3%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2) 관광객의 취향을 고려한 테마형 관광 시설 미비

가족, 친구, 연인 또는 연령대 각각의 주제에 맞춰진 테마형 시설이 부족

- 제주도, 경주와 같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체험형 테마파크가 불충분

(3) 해양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관련한 관광 정책의 부족

상하이, 싱가포르 등 해외의 여타 해양 도시와 달리 선박을 활용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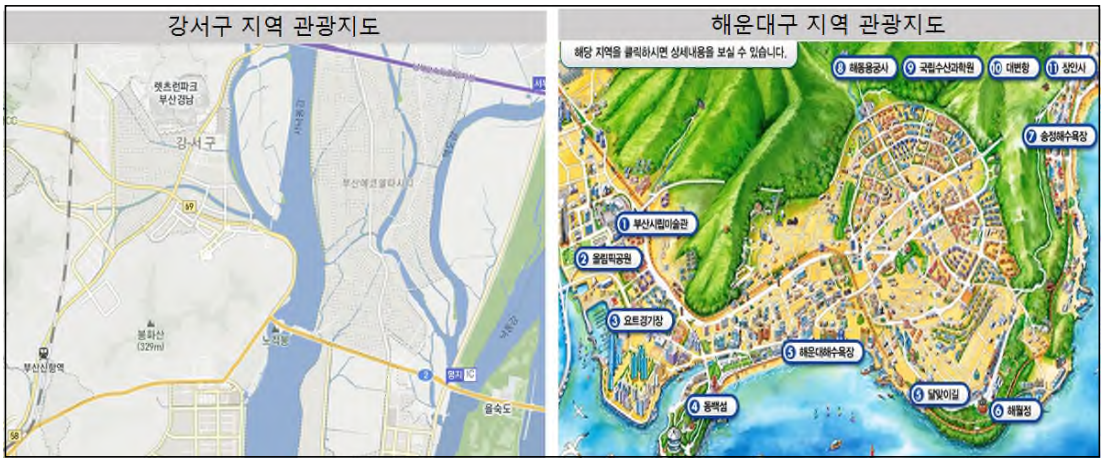
해양관광의 무대인 연안 해역 대부분이 마을어업과 양식장으로 해양공간을 24시간 해양경제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11)]

(4) 발달된 관광지와 낙후된 관광지 간 격차의 심화

해운대구 일대와 서면과 같은 지역은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짐

을숙도, 강서구 같은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다소 낮아 관광지로써 발달이 미비

<그림 1> 지역별 관광지도 비교



출처 : 강서구 · 해운대구 홈페이지

11) 최도석(2016). “해양관광 중심의 해양경제공간으로 바꿔 고용창출과 부산경제 활성화에 활용해야”(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정보지). 부산발전포럼

2. Big Data를 활용한 부산 지역 관광 활성화

(1) Big Data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Big Data'를 활용해 새롭고 신선한 관광 정책 도모

- Big Data란,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수집, 검색, 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경제적인 가치발굴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기술[12)]

- 다양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활동, 환경 등에 관한 미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

<그림 2> Big Data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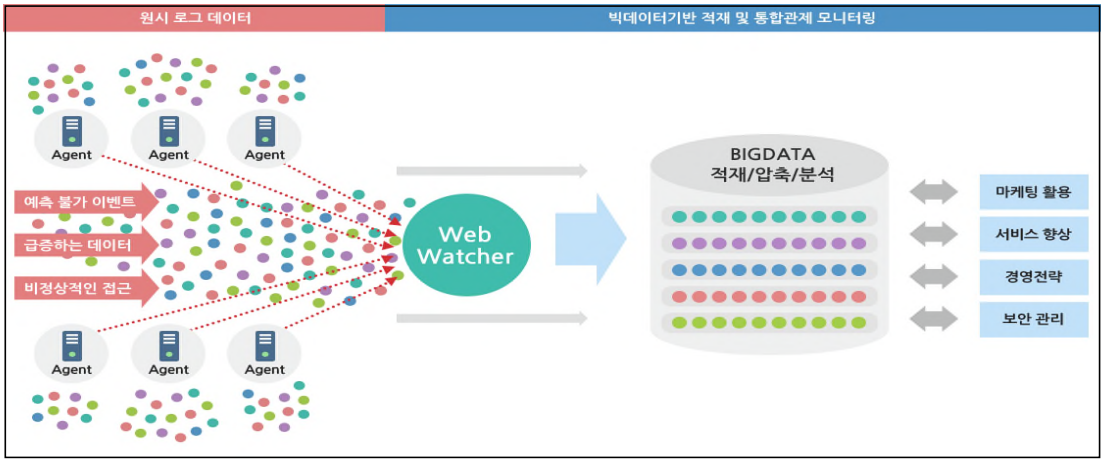
(2) Big Data 활용방안

관광 APP을 통해 Big Data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및 활용하여 부산시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 부산시 관광 진흥과에서 제작한 기존 APP인 '부산투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Big Data를 수집한 후, 정책을 제안

12)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2012). Worldwide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2012-2015 Forecast. Analyze the Future. volume 1.

<그림 3> Big Data 활용방법



1) 부산시 제작 관광 APP인 '부산투어'

부산의 주요 관광지, 축제, 먹거리 등 부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APP

- 주요 4개 국어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게도 효율적인 정보 제공 가능

- 사용자 스스로 여행 코스 제작이 가능하며, 테마에 따라 사용자에게 여행 코스 추천

- GPS 및 증강현실을 통해 사용자의 현 위치 파악 및 주변 관광지 탐색

<그림 4> '부산투어' APP 화면

2011년 이후 방치되어 있고 적절한 홍보 수단의 부재로 인해 다방면에서 문제 대두

- 2011년 이후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재 트렌드에 어긋난 구시대적 정보만을 제공

- SNS와 블로그가 대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전략이 미비하고 사용자의 이목을 끌만한 메리트가 부족

- 관광지, 숙박, 맛집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실시간 예약 시스템, 할인쿠폰 등 여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 부족

- 부산 관광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

2) APP의 발전방향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GPS 및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

-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관광지, 숙박, 맛집 등 할인쿠폰 제공 및 실시간 예약 서비스 구축

- APP 실행 시 GPS를 자동 활성화 기능 탑재
  • GPS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현 위치에서 가까운 음식점, 화장실, 숙박업소나 대중교통 제시 및 자차를 사용한 방문객일 경우, '주차 공간 알리미' 시스템 도축

- 개별 관광객들의 여행 주제에 걸맞은 지능형 관광지 추천 시스템 구축
  •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그와 관련된 관광지를 추천해 사용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제공

- SNS, 대중교통 전광판, 인터넷 연관검색어 등재 등을 선용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구축하고, APP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비교적 부산에 방문 빈도가 낮은 지역에 홍보를 강화

3) APP을 통한 Big Data 수집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객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 후 인식 조사를 실시

- 실행 전, 사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 등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 부산 관광 후, 인식 조사를 실시해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 휴대폰 인증을 통해 중복적인 설문조사 방지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한계성 극복
  - 현재 부산시에서는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통해 Big Data를 수집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이용 등 다양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그림 5> 설문조사 예시

APP 실행 전 설문조사 예시

부산투어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APP 사용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부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부산투어에서 제공하는 관광, 맛집, 숙박시설의 다양한 할인과 예약기능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자료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며, APP 실행 시 GPS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정보 제공 동의 □

1. 여행은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친구 ③ 연인 ④ 가족 ⑤ 단체(직장, 계) ⑥ 기타

2. 부산에 언제까지 머무르실 계획이십니까?
ㅁ년 ㅁ월 ㅁ일 까지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5. 현재 거주지
( )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APP 실행 후 설문조사 예시

부산투어 설문조사

즐거운 여행하셨나요? 본 설문조사는 APP 사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께는 전국 동시 사용 가능한 매장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정보 제공 동의 □

1. 여행은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 자연경관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불만족
2) 교통 및 교통수단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불만족
3) 숙박시설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불만족
4) 식당가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불만족
5) 물가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불만족
6) 전반적 여행 만족도 만족 ① ② ③ ④ ⑤ 불만족

2. 부산시 관광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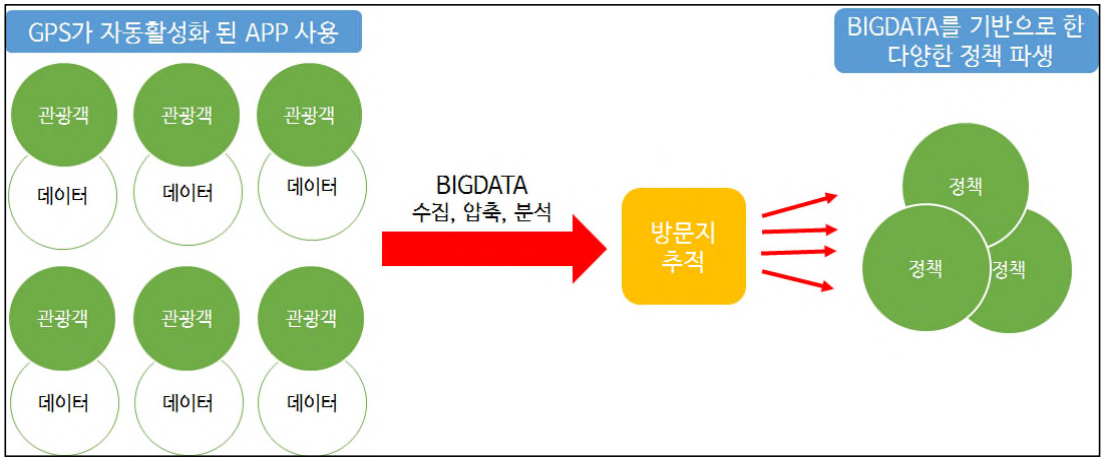
3. 여행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세요.
( )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ig Data 시대에 발맞춘 GPS 이용한 데이터 수집

- 실행 시 GPS 기능 자동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실질적인 방문지 추적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

<그림 6> APP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3. 수집된 Big Data를 활용한 정책 제안

(1)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리는 '갈매기 버스'

GPS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 SPOT을 파악한 후, 그 SPOT을 연결한 버스 노선 개설

- 수요가 높은 관광지를 기반으로 한 노선이므로 불편하고 복잡한 환승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광지에 대한 걱정 없이 버스 하나로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음

- 24시간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부산의 명소에 방문 가능

- 부산광역시 거주자들에게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

-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공데이터와 KT의 심야 통화량 등 Big Data를 활용해 실수요를 예측하고, 도심과 강남을 중심으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방사형의 네트워크로 구축해 노선을 선정해 심야버스 운영[13)]
  - KT CDR 데이터로 유동 인구를 파악한 후, KT 고객 정보 데이터를 통해 목적지 및 이용대상을 파악해 서울시 공공데이터로 최적의 정류소 위치 설치
  - 서울시, 만족도 BEST 10 정책 중 시민 만족도 1위 정책은 '심야버스' 선정

<그림 7> 서울시 '올빼미' 버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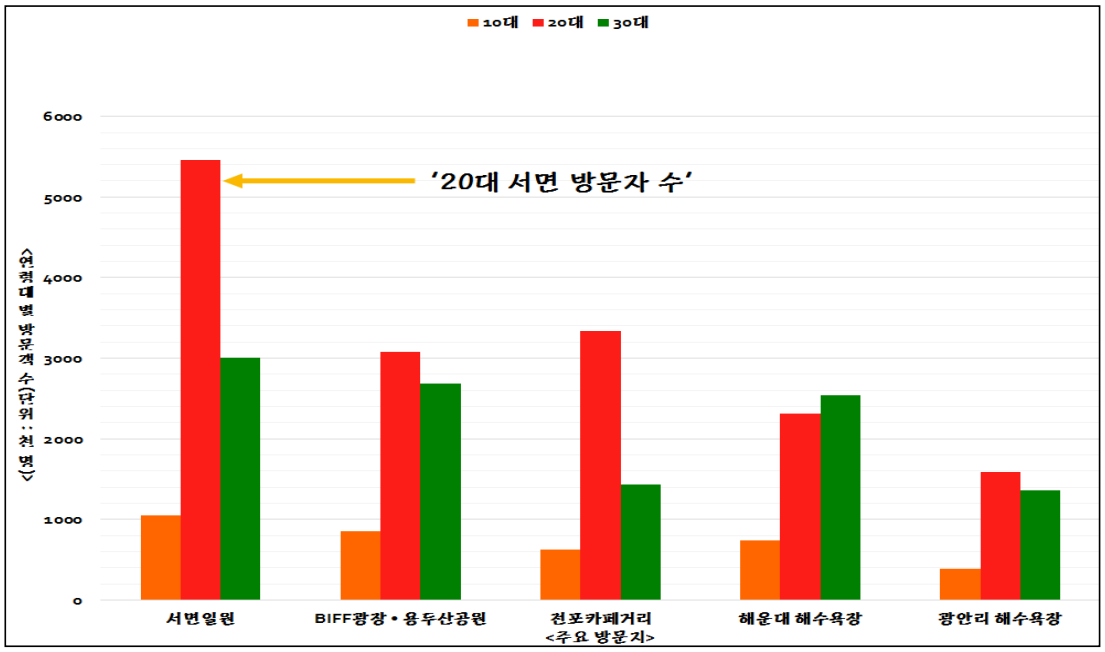
(2)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비일상적 레저공간'

설문조사와 GPS를 통한 정보를 결합하여 관광객들의 취향을 파악한 테마파크 조성

- 친구, 연인, 가족 등 동행자에 따라 많이 가는 장소를 추적하여 계획된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환경, 놀이시설,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
  - 20대 방문객은 '서면일원'이나 '전포카페거리'에 많은 수요가 나타나므로 청소년 문화공간인 '놀이마루'를 발전시켜 '인생사진관'과 같은 테마사진관 개설

13) 이만호(2014). "Area Inside 지역 속으로 : 지역정보화 e-news ; "24시간 서울시 버스는 달린다" 서울특별시 올빼미버스(심야버스) 운행"(지역정보화 88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트 1> 연령대 별 주요 방문지 인원



출처 : 부산시 홈페이지

<그림 8> 테마 사진관 개설

• 성과를 거둔 선례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일본 나고야 지역의 'LEGOLAND'나 연인, 부부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제주도 '러브 랜드' 등이 존재

<그림 9> 테마파크 사례

(3) 해양을 가로지르는 '갈매기 수상버스'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해양관광지를 파악해 그 장소를 중점으로 한 수상버스 운행

- 세계 여러 해양도시에서 운행되어 지고 있는 수상버스를 벤치마킹한 부산만의 독자적인 수상버스 운영
  - 일본 오사카 지역의 'Aqualine(아쿠아라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의 'Vaporrtto(바포레토)'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그림 10> 해외 수상버스 사례

-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양 관광지에 '수상버스'를 이용해 접근 편리성 향상시키고 통행 시간 단축

- 해양관광도시의 특색을 살려 해양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부산만의 특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

- 타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제도' 구축해 교통 요금 절감

(4) 어느 곳이든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매력적인 도시 '부산'

방문객들의 GPS를 수집•분석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

- 실제로 기장이나 강서구와 같은 지역은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직통 버스 개체 수를 확대하거나 부산시 차원에서 셔틀 버스를 수시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접근 편리성 향상

- 비교적 무명하거나 낙후되어 있는 장소에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점, 관광 상품을 개발
  • 스위스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Napfbergland(나프베르그란드)' 지역을 지형 특징을 살린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 특구로 발전시킴
  • 농업인구 이탈과 고령화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던 일본의 미에(三重)현 이가(伊賀)시에 '모쿠모쿠팜'[14]이라는 테마 시설을 건설해 상당한 성과를 거둠

<그림 11> 낙후된 지역 개발 성공 사례

14) 일본 6차 산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농업의 모든 것을 판다'는 기치아래 운영 중인 거대 테마파크임.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 상대적으로 관광소재가 취약한 곳에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구축함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 부산의 대표적인 섬 지역 ‘영도’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초대형 놀이공원을 해양의 특색을 변형시킨 해양놀이공원 건설

4. 정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Big Data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해양 관광 도시 ‘부산’

□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지방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집된 데이터로 지방 정부 간 연계 가능

- 관광 산업으로 창출된 이익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부산시의 독자적 재정 자본 확립을 가능케 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각에 걸쳐 정책 구현 가능

- 상당한 양의 관광 상품 개발(테마파크 조성, 수상 버스 운영 등)로 다방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나아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을 지방 정부로 분산시킬 수 있음

- APP을 통해 수집된 양질의 데이터는 부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지방 정부 간 정책 수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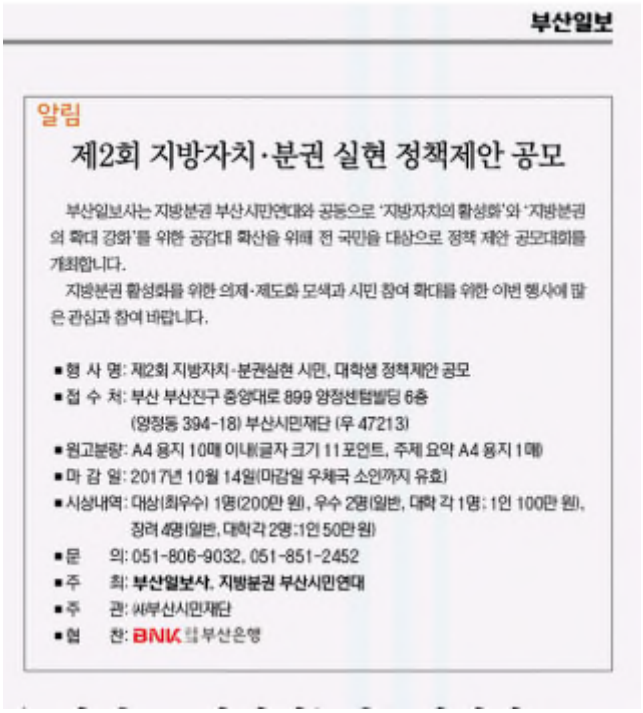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및 접근성이 낮은 관광 지역을 발전시켜 지역 상권을 도모

- 비교적 동떨어져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해당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관광 특구로 거듭남

□ 전략적인 수집방법에 기반을 둔 양질의 데이터는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

- 수집된 데이터를 관광 분야뿐 아니라 복지, 보건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1-1



부산일보

알림

제2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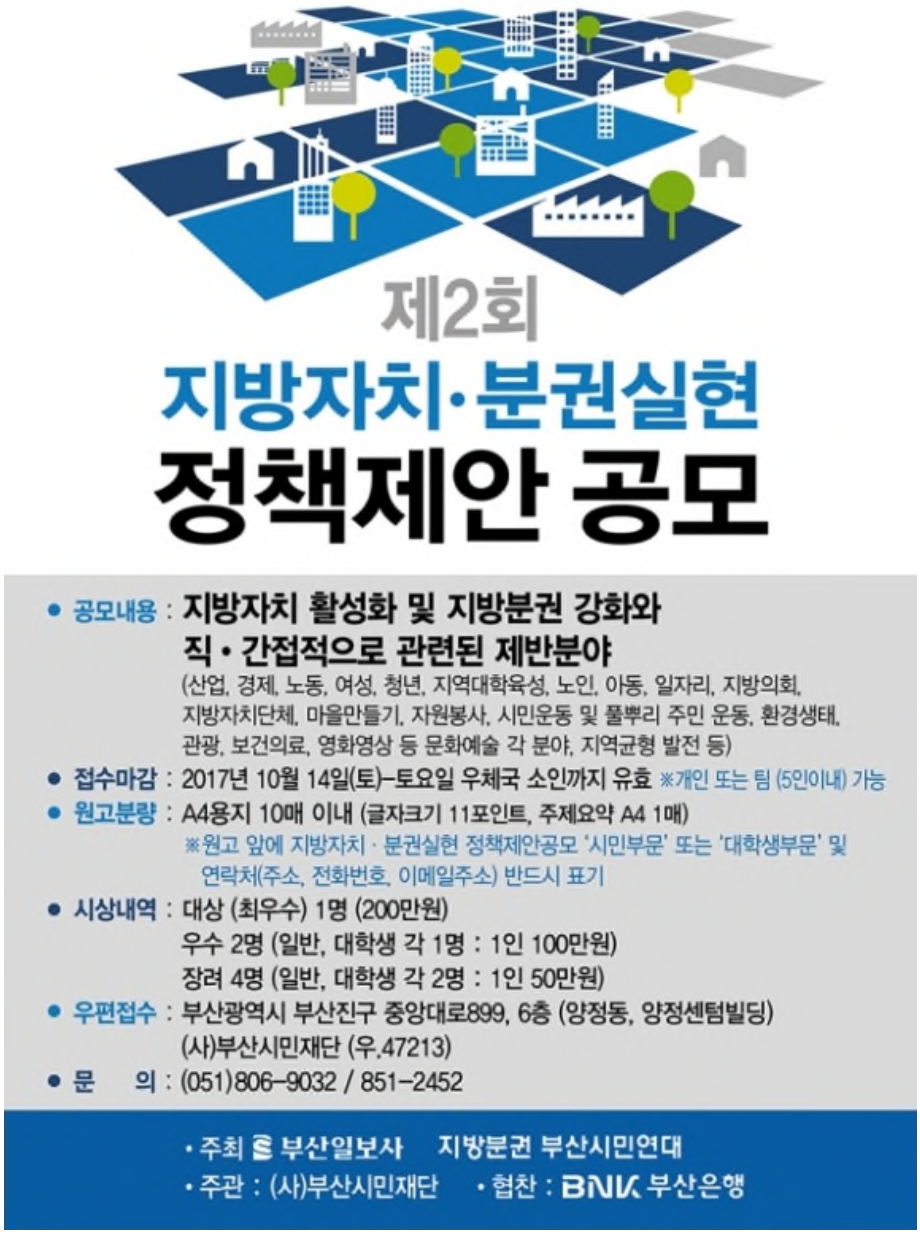
부산일보사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확대 강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공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의제·제도화 모색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제2회 지방자치·분권실현 시민, 대학생 정책제안 공모
- 접 수 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양정센텀빌딩 6층 (양정동 394-18) 부산시민재단 (우 47213)
- 원고분량: A4 용지 10매 이내(글자 크기 11포인트, 주제 요약 A4 용지 1매)
- 마 감 일: 2017년 10월 14일(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시상내역: 대상(최우수) 1명(200만 원), 우수 2명(일반, 대학 각 1명; 1인 100만 원), 장려 4명(일반, 대학각 2명; 1인 50만 원)
- 문 의: 051-806-9032, 051-851-2452
- 주 최: **부산일보사,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주 관: ㈜부산시민재단
- 협 찬: BNK 부산은행

(제2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 알림 기사)

참고자료 1-2



(제 2회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제안 공모 웹포스터)

참고자료 2)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조직현황

고문 김기묘(주부교실 부산지회 회장) 김동석(부산예총 회장)
김만율(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김민남(전 동아대 부총장)
김정각(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김희로(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용수(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회장) 서세욱(부산을가꾸는모임 상임대표)
송영명(전 부산예총 회장) 여창호(전 부산생명의숲 상임대표)
오동석(부산사회체육센터 상임부회장) 윤광석(백산안희제기념사업회 회장)
윤귀남(전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덕혜(여성정책연대 대표)
이청산(전 부산민예총 회장) 정영문(목사)
정창식((사)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이사장)
최소남(전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애(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선규(전 부산YWCA 회장)

공동대표: 김대래(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순례(부산광역시구.군협의회회장) 김위련(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동하(언론노조 부산대표자모임 대표, 국제신문 노조위원장)
박인호(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재율(상임대표,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송진호(부산YMCA 사무총장)
이경신(바르게살기운동부산협의회 회장)
조정희(부산여성소비자연합 상임대표)

정책위원: 강재호(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전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명흠(부산외대 교수, 공동정책위원장)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배준구(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서재호(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희태(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차재권(사)시민정책공방 소장, 부경대 정외과 교수)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공동정책위원장)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철행(영산대 행정학과 교수)

집행위원: 강병관(사) 정책공방 사무국장)
곽순곤(부산예총 사무처장)
권명준(부산을가꾸는모임 상임부회장)
김영석(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 사무국장)
김영주(서부산시민협의회 공동회장)
김해몽(부산시민센터 센터장)
박민성(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박정희(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박진숙(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반민순(부산민예총 사무처장)
변상준(부산발전시민재단 사무처장)
오봉섭(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전 본부장)
윤나영(부산YWCA 정책기획국장)
이성근(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이훈전(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차진구(창조재단 사무처장)
최동섭(부산YMCA 국장)
최지영(부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상 가나다 순

< 참가단체 > 총 142개 단체

1.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28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꽃무리회/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부산지부/부산광역시 조산사회/부산목련회/부산광역시 여약사회/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소비자교육중앙회 부산광역시지부/전문직업여성클럽/대한간호조무사협회부산광역시회/한국부인회 부산지부/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한국휘트니스협회/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작은봉사여성회/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회/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부산지부/한국펄벅다문화회/부산복지총여성봉사회/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부산광역시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부산광역시여성자원봉사연합회/대한미용사회부산광역시협의회/부산광역시생활개선회/한국예술봉사회/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여성문제연구회/부산광역시새마을부녀회

2.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8개)

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11개)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부산경실련/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언련/부산민예총/부산생명의숲/부산생명의전화/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

4.부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22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서부산시민협의회/부산종교인평화회의/부산여성정책연구소/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사)부산여성소비자연합/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안전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밝은세상21시민연대/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사)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사)부산복지21총봉사회/부산민족학교/부산노인대학협의회/부산사회체육센터/국제물류촉진지역연구회/백산정신기념사업회/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5.부산광역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16개)

강서구여성단체협의회/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남구여성단체협의회/동구여성단체협의회/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북구여성단체협의회/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서구여성단체협의회/수영구여성단체협의회/연제구여성단체협의회/영도구여성단체협의회/중구여성단체협의회/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

6.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소속단체(16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연제구 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영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

7. 그 외 개별 단체(41개)

(사)선양복지원/영광문화예술원/소리모아봉사회/(사)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부산여성불자회/부산경남목화예술단/(사)부산색동어머니회/부산사랑여성봉사회/나라사랑회/부산여성민속회/평등가정여성회/여성권리찾기연대/부산여성예절교육회/좋은인연모임회/영광예절미학회/(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부산그림치료봉사회/부산차문화봉사회/자원봉사후원회/라오의산들바람봉사회/장군차차향회/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사)지역경영연구소/포럼'신사고'/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사회복지연대/부산시민센터/부산자치시민연합/청정화합시민연대/언론노조부산대표자모임/부산여성뉴스/부산발전시민재단/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사)시민정책 공방/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재)창조재단/여성정책연대/사)생명그물/부산을가꾸는모임/사)부산그린트러스트